

## 사장은 납기일에 허덕 **주52시간제 D-30** 직원은 저임금에 퇴사 “한 달 뒤, 벌금 맞거나 폐업밖엔 답 없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더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법을 위반해 벌금을 맞거나 문을 닫는 방법 외에는 없다.” ▶관련기사 3면  
31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 도금일반산업단지에서 찾아가 만난 유일금속의 설립수대표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설 대표는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설비를 늘리기에 생산성은 낮고 사람을 뽑자니 일할 사람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줄어든 물량에 인력난까지 겹친 상태에서 주 52시간 시행이라는 악재까지 맞닥뜨려서다.  
유일금속은 이중 표면처리를 전문으로

**르포** 반월 도금단지 가보니  
설비·인력 늘리자니 물량·재정난 수당 줄자 ‘숙련공 이탈’ 사면초가 ‘무방비’ 제조업, 제도강행에 울분  
하는 뿌리산업 기업으로 1999년 창업했다. 자동차 부품 등에 주석, 은 등 금속을 얇게 입히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유일금속 직원은 현장 직원과 사무직원을 모두 합해 30명 정도다.  
현장에서의 공정은 여러 단계인 데 비해 직원 수가 눈에 띄게 적었다. 한 공정당 많아야 서너 명 정도다. 인력보단 숙련도가 더 중요하고, 공정마다 필요한 인력 수가 정해져 있는 표면처리 공정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단적인 이유다.

설비가 먼저다. 설비를 갖춰야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제야 해당 공정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설 대표는 “사람 한 명을 더 뽑는다고 공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며 “설비에 한계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들인다 해도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설비에 적극적으로 돈을 들이기도 힘들다. 가뜰이나 어려운 뿌리산업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업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반월 표면처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겸하는 설 대표는 “우리 단지만 해도 옛날엔 밤 9시까지 불 켜진 공장이 많았지만, 지금은 두세 곳 정도”라며 “작은 기업이 견디기 힘든 극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자 자동화 등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지만, 흑역 물량이 밀려오더라도 소화하려면 야근을 해

야 한다. 인력을 늘리는 것이 해답이라고 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 일하던 직원들마저 떠나고 있다.  
설 대표는 “일부 업체에선 직원이 빠져나갔다. 야근·특근으로 수당을 받아가며 생활하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월급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며 “기업 차원에서라도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은 드물고 인건비 편차도 커(회사에) 오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업을 위해 일정한 시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태희 중소기업진흥공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이다원 기자 leedw@

## “韓증시 주가거품 대외충격에 취약”

한은 “실물경제와의 괴리 심화”

거시금융정책의 완화 기조와 경제 주체의 가격 상승 기대감, 제조업 편중에 최근 주가와 실물경제 간 괴리가 커 주가가 부풀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 같은 괴리는 미국보다 큰 편이어서 그만큼 대외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31일 한은 거시재정팀 김도완 과장 등이 발표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대표성 분석-산업별 비교를 중심으로’ 논고에서 1분기 코스피 지수 수준은 코로나19 위기 전 2019년 4분기보다 45.2% 올랐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0.4% 늘어나는 데 그쳤고 고용과 서비스업 GDP 성장률은 불과 1.5%, 1.0%로 조사됐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2010년대 후반) 제조업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6%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이 실물경제 중 부가가치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6.3%와 18.6%에 그쳤다.  
상장기업이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2000~2004년(2000년대 전반) 각각 10.8%와 4.2%를 차지하던 상장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금융업종 및 부동산업종 제외)은 2010년대 후반 각각 10.2%와 4.7%로 떨어졌다. 이는 각각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2019년 기준, 금융업종 제외)이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내수·서비스업보다는 수출·제조업 위주인 만큼 대외충격에 취약하다”며 “경기예측 면에서도 경기선행지표로 주가를 이용할 때 우리나라는 전체 경기가 아닌 제조업 생산 및 수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하여” 권덕철(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에서 선언문을 읽은 뒤 정부와 사회 각계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아동은 어른의 잣대로 기르는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라며 아동 권리 보장과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다짐했다. 연합뉴스

## 특수분 “땅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 수사본부(특수분)의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이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분은 투기 의혹 13명, 기타 관련성 있는 사안으로 3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예초 국가수사본부에서 내사·수사한 국회의원은 5명이었으나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현직 국회의원 13명 등 85명(34건)을 수사 의뢰하면서 대상이 늘어났다. 특수분은 기존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결한 사안을 제외하고 10건이 신규 사건으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특수분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사건 1453명(315건),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1343명(331건) 등 총 2796명(646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고위 공직자 8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지방공무원 176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LH 직원 77명 등이 포함됐다. 정수현 기자 int1000@

## “글로벌 탄소중립 마중물” 文대통령 ‘서울선언문’ 채택

### 녹색미래 협력·지원 강화 ‘P4G 서울정상회의’ 폐회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의지를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5면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밤 10시부터 주재한 정상토론회 세션에서 “국제사회가 포용적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 기술, 자원, 역량 배양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토론에는 각국 지도자와 국제통화기금(IMF) 대표 등 총 14명이 실시간 화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토론회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참석해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녹색회복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기후행동 강화 및 민간 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포용적 녹색회복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녹색기후기금

(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우리나라 소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회의에서 볼프 파겟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사무총장이 발인한 순환경제 세션 기조연설이 좌중의 눈길을 끌었다. 파겟 사무총장은 “지금의 생산소비 유형을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바닷속

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을 수 있다”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해 각국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P4G 정상회의는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서울선언문은 정상회의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을 담은 문서다.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 등 다양한 기후·환경 목표에 기후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이 광범위하게 동참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결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포용성 강화를 위해 기후 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환 기자 whan@

# 美, 매그나칩반도체 '中매각' 빗장 거나

CFIUS, 주총 2주 앞두고 매각 절차 심사  
알리바바 등 중소기업 사업 확장 불허 전력  
독점력·국가 안보 이유 합병 제동 가능성

연도	내용
2004년	옛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분사
2009년	미국계 애비뉴캐피탈에 인수
2011년	뉴욕거래소 상장
2020년	파운드리사업부 SK하이닉스에 매각
3월	중국계 컨소시엄 와이즈로드캐피탈과 매각 계약 체결
2021년	5월 미국 CFIUS, 매그나칩 매각 공식 검토
6월	매각 인건과 관련한 주주총회 개최 예정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매그나칩반도체를 중국계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는 건(件)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CFIUS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미국 내 외국인 투자현황을 분석·검토하는 기관으로, 중국 자본과 관련된 인수·합병(M&A)을 다수 무산시킨 전력이 있다.

3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매그나칩반도체는 이달 중순 CFIUS로부터 이번 매각에 대해 심사받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릴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은 5월 28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6월 15일 매각과 관련한 주주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또 다른 미국 규제기관이 매각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들여다보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선 것이다. 매그나칩의 현재 주요 주주가 미국계 펀드이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심사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그나칩은

2011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이번 매각이 성사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매각 대상은 중국계 사모펀드인 '와이즈로드캐피탈'로, 금액 규모는 약 14억 달러(1조5828억 원)이다.

CFIUS가 이번 매그나칩 매각 건에 관여하고 나선 것은 바이든 정부 들어 강도가 세지고 있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CFIUS는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기관으로 인수 거래 금지를 결정하면 해당 거래는 마무리 단계라고 해도 '무효'가 된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 2018년, '외국인투자위원회

사현대화법'(FIRRMA)이 제정되며 CFIUS의 역할과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중국 기업의 M&A나 미국 사업 확장 시도에 대해 불허 의견을 표한 적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2018년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머니그램 인터내셔널 인수가 CFIUS의 반대 의견으로 무산됐다. 지난해엔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에 현지 사업을 위해선 미국 기업에 사업을 매각하라는 내용의 분할 명령을 내렸다. 5년 전에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었던 칭화유니(紫光集團) 그룹의 미국 기업 인수를 막아선 전적도 있다.

중국 매체에서도 이번 매각 건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IT 전문가인 샹리강(眞立剛)의 말을 인용해 "CFIUS가 합병 저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독점력이나 국가 안보 등의 이유를 제시해 합병을 막아서거나, 승인을 아주 오랫동안 연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매그나칩 측은 회사의 주요 연구·생산시설과 자산이 모두 한국에 있고, 나머지 판매 활동도 중국, 홍콩, 일본 등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매그나칩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합병에 관한 추가 질문에 답변하는 등 CFIUS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인터뷰 "일본 원전수 방류 과정 모든 의혹 철저히 검증"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31일 본지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방류에 관한 모든 과정과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 양자 협의체를 추진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에 IAEA와의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수 문제가 IAEA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라파엘 그로시(아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본지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양자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은 양국에 달린 일이고, IAEA의 자체 검증과 양립 가능한 일"이라며 "세계 기준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IMO에 IAEA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는 정부가 다른 국제기구와 대화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권 정부의 권리"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기구가 해당 문제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것이다. IMO와 IAEA가 하는 일과 그 권한은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막대한 후원금이 IAEA의 지지를 끌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그는 "어떤 활동이든 후원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별도로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한국 언론에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이번 사안이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방류의 모든 과정을 검증할 것이고, 지금까지 보내준 모든 질문과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문을 열어 놓을 것이고, 어떤 요청도 환영한다"고 다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낸드플래시 사업〉

## SK하이닉스, 인텔 인수 마지막 관문은 '만리장성'

韓·美·EU, 사업부문 인수 승인했지만  
中, 美규제 반발 등 승인 고의 지연 촉박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인수가 주요 국으로부터 연달아 승인을 받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미·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 속에서 중국의 승인이 과제로 남았다.

31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사업부문 인수를 승인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3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승인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럽 반독점 심사기구 'EC(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조건없는 승인

(Unconditional Clearance)'을 받았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인수합병은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약 10조 원에 인텔 낸드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주요 8개국에서 반독점 심사를 받아왔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8개 지역 가운데 미국, 한국, 유럽연합 등 3곳에서 승인을 받았고, 중국, 브라질, 영국, 싱가포르, 대만 등 5곳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이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관문은 중국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 인수로 적절한 시기에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승인이 제때 이뤄지는 것이 관건이다.

반도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굴기를 선

언한 중국이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놓고 시간을 지연할 우려도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중국은 최근 미국의 수출 규제 등에 반발하면서 반도체 업체 간 인수합병 심사를 고의로 지연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일본 반도체 기업 고쿠사이일렉트릭을 인수하겠다고 2019년 7월 발표했다지만, 중국의 승인 심사 지연 등으로 올해 3월 인수가 무산됐다. 2018년에는 미국 퀄컴이 세계 2위 차량용 반도체기업 NXP를 인수하려다 중국의 승인 지연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 엔비디아의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 인수를 놓고 중국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하이닉스와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독과점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이 인수를 불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태성 기자 tskwon@

SOUND OF THE FUTURE

# 더현대서울

2020/21년 'RETAIL DESIGN OF THE YEAR' 최초 수상

"Retail to lead a revival, 리테일의 부흥을 이끌 엄청난 프로젝트"

美 모노클 매거진 2021 TOP 50 DESIGN AWARDS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혁신적 공간  
Great design, to be the  
World's best shopping centre

"더현대 서울은 세계 최고의 쇼핑센터가 되겠다는  
높은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훌륭하게 디자인 되었다."



혁신적 공간 설계



사운즈 포레스트



위터플 가든



# “평소에도 사람 구하기 힘든데” 영세 제조업체 ‘발 동동’

## 중소 업종별 ‘양극화’ 우려

#AI(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A사는 올 초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특별 분업으로 근무량을 정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는 협업하는 방식이다. 집중 업무 시간(오전 11시~오후 4시)을 제외하고 출퇴근이 자유롭다. 반면 금속 제조 중소기업 B사는 하루치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날들이 늘고 있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있는 만큼 탄력·유연 근무제 도입도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도 충원해야 하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7월부터 5~49인 중소기업도 의무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과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종고를 겪는 가운데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중소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3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분석도 있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5~49인 사업체 수는 80만 2059개로 전체 대비 19.20%에 해당한다. 이들 중 △제조업은 15만 2034개(18.95%) △도소매업 13만 2690개(16.54%) △숙박·음식점업 11만 5979개(14.46%) △정보통신업 1만 5272개(1.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제조업에는 국가 기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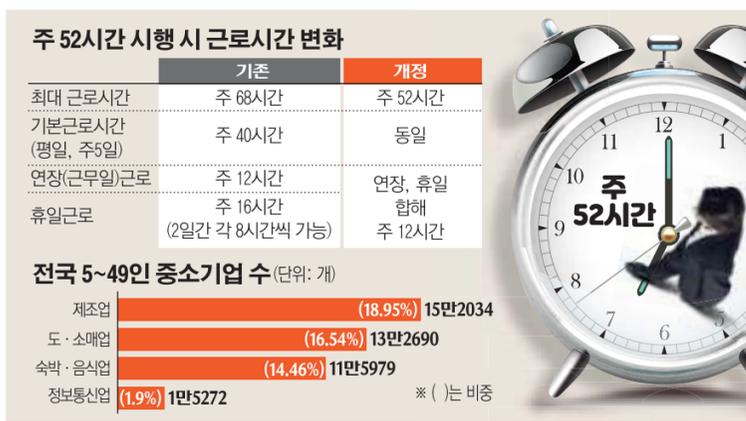
IT기업들 ‘주 40시간’ 선제 대응 제조업은 생산직 기피에 큰 충격

근로자 1인당 年 834시간 단축 인건비 추가 부담 3조원 달할 것

업인 기계, 조선, 자동차부터 미래 산업인 소재·부품·장비 기업도 포함돼 있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기존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해 주 최대 68시간(기본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휴일 근로 16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을 포함한 주 최대 법정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으로 정해졌다. 근로자 1인이 가능한 모든 근로를 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834시간, 약 23%의 근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한다.

생산설비가 있는 제조업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을 가동하고 운영해야 해서 인력 충원은 필수다.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인력을 확대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52시간제 도입으로 약 3조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설비가 대부분 지방에 있고,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까지 어려워지면서 이미 대다수의 제조업은 만성



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5~49인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 상황은 더 어렵다.

한 조선업 직원은 “수주량 증가로 업무량이 늘고 있어 장기간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기후에 영향을 받는 야외작업이 많은데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한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고 또 숙련된 인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다수의 IT(정보통신)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운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타 산업군보다 비교적 공간과 시간 제약이 없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한 영향이다. 효율과 혁신을 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IT 기업 자체적으로도 복지를 향상하려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재택·탄력·자율출퇴근 근무가 보편화해 있다.

이처럼 산업 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서 도입한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가령 프랑스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유럽 내에서도 가장 짧은 수준이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협상할 수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정도에 따라 사회보장분담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 고용장출을 많이 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독일은 하루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면서 근무단축으로 발생하게 되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미래전략연구단은 “업종별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는데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나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 물량 증가로 인력 수요가 많다”며 “이들이 코로나19 경기 회복에 견인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력난 등 주 52시간제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이다원 기자 leedw@

## 인터뷰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뿌리산업 인력난 가중될 수도 최소 1년 이상 제도기간 필요”

“어떡해야 하나.” 특히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여러모로 열악하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갑갑할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 도입 한 달을 앞두고 이태희(사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전한 중소기업계 분위기다.

이 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 묶이게 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능력이 높지도 않고, 설사 능력이 있다 해도 만성적으로 사람을 구하기 힘든 곳”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이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인 만큼 기업 하는 입장에서 갑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뿌리산업과 건설, 조선 등 일부 업종에서는 문제가 커진다. 이 본부장은 “뿌리산업은 전통적으로 3D 업종으로 알려져 노동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10명이 2교대로 돌아가던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3교대로 늘려야 한다고 치면 최소 다섯 명은 더 고용해야 한다”며 “뿌리산업은 한 번에 다섯 명이나 되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한 것도 살펴야 한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일감이 줄어들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유인이 줄었을 것”이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선 코로나19와 일감 축소란 두 가지 타격을 입은 셈”이라고 진단했다.

관건은 제도 도입 속도다. 이 본부장은 “근로시간이 긴 문제는 국가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방향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고 말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이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잦아든다 해도 산업 현장의 주문이 늘어나거나 보복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들은 이를 대비할 시간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주 52시간 제도 도입과 관련해 최소 1년 이상의 제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9개월의 제도기간을 줬다”며 “더 열악하고 힘든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인력 대책도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에는 인력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만드는 아니겠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자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다모았다 KB Pay

KB 국민카드

# 美·EU 내달 성인 70% 접종 '일상 복귀 카운트다운'

## 글로벌 집단면역 가속화

美 “독립기념일에 코로나 해방”  
EU, 백신 여권으로 이동 보장  
이란 “4개월 내 집단 면역” 자신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면서 집단면역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나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코로나19 최다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졌던 미국은 백신 접종에 힘입어 빠르게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날 기준 성인의 절반 이상인 51.5%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62.6%가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월 4일까지 자국 내 성인의 70%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 독립기념일을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추세라면 목표 달성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백신 접종이 궤도에 오르면서 미국인들의 생활도 점차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 주말 시작된 메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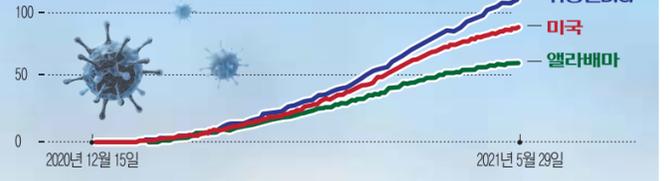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해변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람들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만끽하고 있다.

### 각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b>미국</b>	① 현재 전체 성인 절반 이상 백신 접종 완료 ② 7월 4일까지 성인 70% 최소 1회 접종 목표
<b>유럽</b>	① 7월 1일 백신 여권 시행 ② 7월 중순까지 성인 70% 이상 접종 목표
<b>이란</b>	자체 개발 백신으로 3~4개월 내 집단 면역 체계 목표

### 미국 100명당 투여된 백신 용량 추이

(단위: 회분) ※출처: CNN



샌타모니카/로이터연합뉴스

얼 데이(현충일) 연휴에 여행길에 나선 사람들로 인해 미국 전역의 주요 공항과 대도시 도로가 북새통을 이뤘다. 관광지 곳곳과 해변, 놀이공원 등은 마스크를 벗어 던진 관광객들로 가득했다.

올여름에는 축제,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동식 화장실 회사들이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포틀랜드의 한 이동식 화장실 업체는 “3월에 100대의 새 화장실 제작을 주문했는데 다음 주에나 받을 수 있다”며 “보통은 길어도 4주면 제품이 온다”고 밝혔다.

차량 호출 서비스 수요가 운전자 수를 압도할 정도로 급증하면서 미국 양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최근 일제히 요금을 인상했다. 승객들이 차량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도 길어졌다. 리서치업체 라쿠텐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의 4월 요금은 전년보다 40% 올랐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7월 중순까지 성인 인구의 70%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그린 인증서’로 잘 알려진 백신 여권도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 자유로운 이동을 한층 더 보장

할 수 있게 된다.

헝가리는 인구의 52%가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헝가리는 사용하지 않은 백신 비축량에서 14만 개 이상을 아프리카와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기증하기로 하는 등 여유를 보였다.

중동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국가인 이란은 자체 개발 백신을 통해 향후 3~4개월 안에 집단 면역 체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국내에서 생산 중인 백신이 내달 상용화할 것”이라며 “이후

서너 달 안에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 제약회사 시파파메드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코비란(COV-Iran)’은 현재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미 대량 생산 체계에 돌입해 100만 회분을 만들어 냈으며, 한 달에 300만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초기 설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보건부는 지난달 23일 “인구 100명당 122.39회분의 접종이 이뤄져 121.92회분의 이스라엘을 앞섰다”며 “우리의 접종률은 세계 최고”라고 강조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 “항체 생긴 확진자도 백신 인센티브 줘야”

### 민주당 백신 특위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항체가 형성된 경우 백신 접종자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선 이 같은 의견들이 제기됐다.

항체 확진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위 위원장이자 당 최고위원인 전혜숙 의원이 제안했다. 전 의원은 “확진자에 대해 항체 형성 여부를 판단해 접종자와 같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항체가 형성된 분은 해외 출입 시 접종자와 같은 대우를 하는 방안과 함께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백신을 접종토록 하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결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을 경우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있는데 확진된 항체가 생긴 분들은 밀접접촉이 있어도 격리 해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치기공사와 간호학과 실습생 등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와 택배기사와 돌봄노동자 등 필수 분야 근로자들도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에 동석한 백신 위탁생산 및 개발을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제약사 측에서 직원들을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핵심적인 건 60세 이상 고령층 80% 이상 백신 접종이 돼야 해 접종 예약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전날까지 평균 예약률이 68.5%인데 대구가 57.9%, 경북이 64.4%로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 오늘부터 가족모임 8명+ α ... 7월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1일부터 직계가족모임 허용인원이 '8명+알파(α)'로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방향'에 따라 1일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접종을 받은 가족은 10명, 3인이 접종을 받았다면 11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또 고령층의 우울감 해소와 사회적 활동·모임 재개를 위해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예방접종 완료자 뿐만 구성된 소모임에 대해서만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 섭취 등을 허용

### 1차 접종자 기준 인원서 제외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면제

하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유지할 방침이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6월부터 국립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



서울 구로구 한 경로당에서 관계자가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한 차례 이상 받은 회원들만 6월 1일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를 개최한다.

7월 이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사회적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2차 조정

안을 시행함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보완책도 마련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이 이뤄지면 그것과 상응하게 현장 방역 점검 활동도 강화해 급격히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에 확진자가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핀셋 방역, 현장 점검 강화 등으로 1000명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하절기에는 국민이 안전하게(일상)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 국산 코로나 백신, 비교임상 가능해진다

### 3000명으로 3상 프로젝트 마련 식약처 “해외 규제당국 설득할 것”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비교임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정부는 비교임상으로 허가를 받은 국산 백신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규제당국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백신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하고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해 31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 개발 중인 26개 품목에 시험자료 준비 상담을 57차례 실시하는 등 초

기 단계부터 연구개발자를 지속해서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국내 5개사가 임상시험에 진입했고, ‘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해 3상 임상시험 진입과 국산 백신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식약처가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은 △임상 1·2상 △임상 3상(일반적인 유효성 임상) △임상 3상(비교임상) 등 총 3종으로,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제약사도 쉽게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백신의 임상 3상은 수만 명의 시험대상자가 있어야 가능했지만, 현재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위약대조군을 모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식약처 백신 심사 전문

가들은 이미 허가된 백신과 개발 중인 백신을 중화항체와 같은 면역원성 지표 등으로 비교하는 ‘면역원성 비교임상 3상’ 설계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대규모 피험자 수와 위약대조군 모집 없이도 임상 3상이 가능하다. 다만 ‘면역원성 비교임상 3상’으로 국산 백신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임상 방식이 해외 수출 시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는 식약처가 해외 규제당국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 면역원성 비교임상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이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3상 계획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면역원성 비교임상 3상의 경우 부작용 등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피험자 인원을 최소 3000명으로 설계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은 그간 식약처에 제출된 국내외 임상시험 계획서와 각종 허가 임상시험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WHO 백신 심사에 전문가로 참여한 경험 등을 토대로 골격을 마련했다.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자문했다.

표준안에는 임상단계별로 임상디자인, 시험대상자 선정·제외기준, 평가변수(면역원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상세 기준을 구체적인 예시를 담아 제시했다. 비교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에는 대조백신 선정, 임상디자인 등 상세 기준을 담았다. 박미선 기자 only@

# “이대로면 2050년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더 많아”

## 세계 각국 “탄소중립 국제협력 강화해야” 촉구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경제 분야별 구조 혁신과 함께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1일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열린 다양한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변화를 촉구했다.

◇“순환경제 원년...공정한 전환 위해 노력” = 환경부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스마트 물관리’와 ‘순환경제 전략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없는(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을 진행했다.

순환경제 세션에서 한정에 환경부 장관은 ‘GACERE’(Global Alliance on Circular Economy and Resource Efficiency)에 가입해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출범한 GACERE는 유럽연합(EU)을 주축으로 노르웨이,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 순환경제·스마트 물관리 등 중요 에너지 시스템 적용 최우선 과제 온실가스 25%, 식품생산이 유발 ‘푸드시스템 혁신’ 기아 등 해결을

롤드 라페어 네덜란드 수자원인프라부 차관은 플라스틱·제조업·건설·바이오매스·소비재 등 5개 업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천연원료 사용을 50% 감축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제임스 킨시 코카콜라 최고경영자(CEO)는 포장재에 재활용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하는 등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을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재활용 페트병 기준 수립을 위해 한국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물 관리 세션에서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물 분야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스마트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아이슬란드 환경운동가이자 작가인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은 기조연설에서 “아이슬란드의 빙하는 2160년에 더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30년이 매우 중요한데 화석연료의 연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실행촉구문’도 내놨다. 촉구문에는 △기후 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와 자연 서식지를 위한 스마트 기술기반 물관리 △동등한 참여와 책임 있는 곳(Good) 거버넌스 강화 △탄소 중립을 위한 물관리 투자 확대 필요성 등이 담겼다.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시스템 혁신해야” =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에너지세션’은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푸르른 지구’를 주제로 진행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을 기존 산업의 축소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 사례로 한국의 그린뉴딜 계획을 소개했다. 에너지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 분야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파리 비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지는 높지만 올해 탄소배출 증가율이 사상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진단한 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탄소 포집 시스템(CCS)과 같은 첨단기술을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 25% 식품생산에서 비롯...식량 위기 우려 = P4G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5개 분야 중 하나인 식량·농업 분야 세션에서는 탄소중립과 식량위기를 해결을 위해 푸드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김효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차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이 식품생산에서 비롯된다”며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식품의 약 3분의 1을 폐기하고 있고, 동시에 매일 약 10억 명이 달하는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코로나 19보다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며 “기후위기가 식량위기가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국가별 노력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도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농 방식, 버려지는 식품 손실을 자원화한 사업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푸드시스템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혁신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가 에너지 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이 ‘순환경제 세션’에 참석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 김동관 “기업이 기후변화대응 해결책 제시해야”

〈한화솔루션 대표〉

###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구축 ‘그린비즈니스’에 역점

#### 金, 탄소감축 ‘수소 수소기술’ 제시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가 기업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31일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에너지 세션 기조연설에서 “한화는 작은 발전이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며 “스마트하고 경제성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 푸르른 지구를 위한 저탄소 에너지 해법”을 주제로 열린 에너지 세션에서 본회의 연설자로 나섰다.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 중 유일하게 본회의 연설을 했다. 김 대표는 “한화는 매 순간 혁신을 통해 눈에 보이는 진전을 만들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화그룹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화그룹은 2010년 태양광 사업에 뛰어

든 이후 글로벌 태양광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김 대표는 “기존 생산 설비를 활용하면서도 획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며 수소 수소 발전 기술을 해결책 중 하나로 소개했다. 수소 수소 발전은 가스 터빈에서 수소와 LNG(액화천연가스)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H2GT(Hydrogen To Gas Turbine)로도 불리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LNG 발전보다 이산화탄소를 30% 이상 줄이고 산화질소 배출도 막을 수 있다.

나경수 SK종합화학은 사장은 P4G ‘순환경제 세션’ 패널 토론에서 “SK종합화학은 핵심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그린(Green) 비즈니스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나 사장은 SK종합화학이 폐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3R(Reduce·Reuse·Recycle) 등 그린 비즈니스 사례를 공유하고 범지구적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나 사장은 “SK종합화학은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폐플라스틱을 다시 순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페페트병, 페비닐 등 폐플라스틱을 열로 분해해 이를 다시 플라스틱 원료인 열분해유로 재탄생시키는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해 글로벌 열분해유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상업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 플라스틱 순환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익 창출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열분해 등의 화학적 재활용으로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크게 줄여 탄소배출권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기술 개발과 자본 투자를 통해 생산공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 정의당·환경단체 “탄소중립 말잔치에 불과”

### “그린 워싱 P4G” 비판 쏟아내 “석탄발전 등 토건 백지화해야”

31일 한국에서 처음 열린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 P4G가 막을 내린 가운데 정의당과 환경단체에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정의당에선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나서 “지금까지 기후 대응에 있어서 이윤배반적으로 행동했던 문재인 정부가 과연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장 다음 달에 건설 허가 타당성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신서전환력발전소가 준공 예정이다. 현 정부가 얼마나 말로만 그린뉴딜을 외치고 있는 것인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개회사는 자화자찬으로 가득했었던 ‘기후약당 정부’로서 반성과 성찰은 없다”며 “탄소중립 노력에는 소극적, 그린워싱에는 진심”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단체 측에선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기자회견도 열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P4G 정상회담이 열리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에서 31일 시민단체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회원들이 탄소로 지구가 불타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외치며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결정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 이상 감축하고, 가덕도 신공항 등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토건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석탄, 송전탑 백지화 도보순례단”도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를 당장 중단하라”며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

구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석탄발전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이 통과되고 방향만 잡으면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빨리 정리해야 줄이기 어려운 산업 부문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며 “NDC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건 이런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 P4G 개막영상에 서울 아닌 평양 ‘망신살’

### 한강 여의도 아닌 北 능라도 등장 靑 “외주 제작사 실수” 비공개 처리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오프닝 영상서 나온 평양의 능라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회식 영상에 평양 지도가 ‘서울’로 소개되면서 국제 망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막을 올린 P4G 회의 개막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사에 앞서 오프닝 영상이 나왔다. 영상에는 남산, 광화문, 한강의 전경 등이 나오며 개회도시 ‘서울’을 소개했다. 이후 강 위에 떠 있는 섬을 시작으로 줌아웃(zoom out)되며 지구촌 전체로 뻗어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 화면에 등장한 섬은 한강의 여의도가 아니라 북한 능라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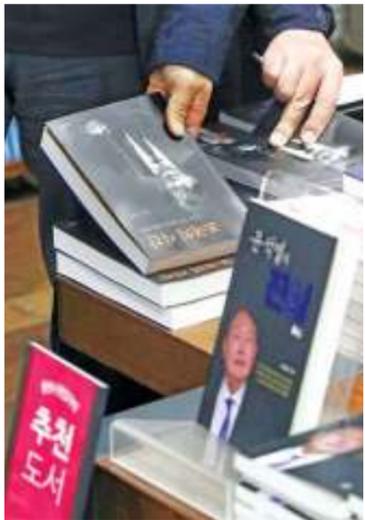
논란이 일자 31일 오전 청와대는 유튜브 계정상의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청

와대 측은 “외주 제작사의 실수”라면서도 “철저히 검사해야 했지만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 수정조치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입장문을 내고 “편집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위성지도가 삽입됐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누리꾼들은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건 고의일 수밖에 없다”, “P가 평양을 뜻하는 것인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정일환 기자 whan@

# ‘조국의 시간’ 맞이한 민주당 ‘혼돈의 시간’



31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이 진열돼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다룬 책. 연합뉴스

### 조 전 장관 회고록 발간... 박용진·조웅천 “지도부 입장 정리해야” 공정 논란 지적도... 이낙연·정세균·추미애 “검찰개혁 힘 보탬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31일 발간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물론 소속 의원들은 ‘조국 회고록’에 당혹감을 나타내며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조웅천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은 다시 ‘조국의 시간’이라는 수렁에 빠져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을 돌아보며 민심을 경청하는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하는 중에 하필 선거패배의 주요한 원인 제 공자로 지목되는 분이 저서를 발간하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 참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조 의원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며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임박한 정치개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하여 일관되게 민생에 전념하는 집권 여당의 듬직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 출간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권리”라며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이 보여줬던 일 중에 내로남불로 보이는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야당일 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태도와 기준과 잣대로부터 벗어났었던 일은 없었던 건지 돌이키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

면 당에서 책임 있게 표현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가 이런 논란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에게 답을 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조 전 장관으로 축발된 공정 논란, 또 우리 사회의 공정 인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팔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견저히 수용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 그걸로 축발된 여러 가지 논쟁과 쟁점들을 단락짓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며 “조 전 장관께서 뿌리신 개혁의 씨앗을 키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남았다. 조 전 장관께서 고

난 속에 기반을 놓으신 우리 정부의 개혁 과제들, 특히 검찰개혁의 완성에 저도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28일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발가벗겨지고 상처 입은 그 가족의 피로 쓴 책이라는 글귀에 자식을 둔 아버지로, 아내를 둔 남편으로 가슴이 아리다”며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조국의 시련은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라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과 여론재판의 불화살받이가 된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단 없는 개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윤석열 대권수업 끝났나 ‘국힘 합류’ 무게

### 강릉서 친구 권성동 의원 만나 국힘 당권 주자들도尹 러브콜 일각에선 “정치활동 시기상조”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어릴 적 친구인 국민의힘 중진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석 달에 가까운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정치인과 대면한 셈이다. 그가 대선 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도 알려져 이른 시간 내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단하고 정치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강릉에서 권 의원을 비롯해 강릉지정 근무 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저녁을 했다. 권 의원 측도 “지난 주말 윤 전 총장을 만난 것

이 맞다”며 “윤 전 총장한테 며칠 전 연락이 먼저 와서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취지로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권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검찰 선배이자 어린 시절 동갑내기 친구다.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주고, 국민의힘과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4선 중진 의원이기도 해,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를 포함한 정치적 행보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예상하는 대목이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이번 만남이 국민의힘 합류에 무게가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필요성, 가능성이 끊임 없이 거론됐다. 제3지대라는 불모지보다는 기반이 잡힌 거대 정당이 훨씬 더 유리

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 전 총장 지지층과도 교집합이 커 이 역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나선 후보들도 ‘윤석열 영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대부분 당권주자들은 “당내 기반이 없는 외부 인사들도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는 룰을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활동 본격화’라는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반장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상대해야 하는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면서 “이번 상황은 정치는 하고 싶은데 겁도 나고 판단도 잘 서지 않다 보니 친구를 만나 고민을 나누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



윤석열(가운데)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강원 강릉시의 한 식당에서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한 관계자도 “기존의 메시지 정치 등으로는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권 의원을 만났거나, 단순히 친구인 권 의원을 만난 것일 수도 있다”며 정치 행보

를 위한 해석은 자제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권 의원을 만나는 게 위험 부담이 없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on@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6월호 발매



## COVER STORY 아름다운 인생 졸업식

- PART 1 장례 문화로 본 웰빙
- PART 2 '생전 정리'로 후회의 대물림을 막다
- PART 3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중간점검
- PART 4 찾아줘 내 상조
- PART 5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도 될까?
- PART 6 "슬퍼도, 슬프지 않아도 괜찮다"



## 신라보가 만난 사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관통하는 브라보 '디지털' 라이프 1990년대를 사로잡은 최고의 MC 임백헌



생활 속 법률 상식  
안전한 상속 솔루션, 신탁  
구해줘 부동산 은퇴 후 리츠 해볼까?

## 느린 여행 강화도 고려산 아래 묵묵한 내공의 우공책방



감성 예술! 미술관 여기 산기(山氣)와 햇살과 바람, 그리고 볼 만한 그림들



습기로문보살생량 7월 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4세대 실손보험'

가보고 싶은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 ② 전복 고창군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 아이

우리 할머니

우리 동네

우리 아빠

‘우리’라는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이 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OECD, 韓 성장률 3.8%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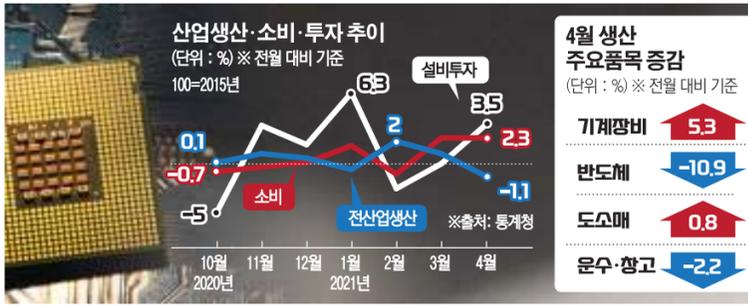
서비스업 생산·소비 '역대 최고'

사업체 종사자 두 달 연속 증가

# 한국 경제, 코로나 위기 딛고 '본궤도' 오르나

### OECD, 내년까지 빠른 회복 전망 종합지수 변동치도 3개월째 상승 제조·숙박업 고용 감소폭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부진했던 서비스업생산과 소비가 4월에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사업체 종사자 수도 전년 대비 38만 명 가까이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종사자 감소폭도 축소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두 달 만에 0.5%포인트(P) 상향 조정한 3.8%로 전망했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기를 회복 국면으로 진단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4월 산업활동이 광공업·전산업



생산이 일시조정받았으나 대부분 주요지표가 위기 전(2020년 1월) 수준을 웃돌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올해 성장률 3.8% 전망 = OECD는 31일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3월 전망과 비교해 0.5%P나 상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확장적 거시정책, 거리두

기 완화 등에 따른 소비 개선, 한국판 뉴딜 등 투자 증가,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호조 등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경제가 2022년까지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업생산·소비 역대 최고 =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1년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서비스업생산지수(계절조

정)와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가 각각 110.2와 120.5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과 소매판매는 코로나19로 그동안 부진했던 분야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효과 지속과 백신 접종 진행이 확대되는 측면, 따뜻한 날씨로 야외활동 수요가 증가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며 "거시적으로 본다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째 동반 상승했다.

◇사업체 종사자 두 달 연속 증가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60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7만9000명(2.1%) 늘면서

2개월째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감소세를 지속해 오다가 올해 3월 플러스(22만3000명)로 돌아섰다. 37만9000명 증가폭은 2019년 9월(39만6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산업별로는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종사자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7000명 줄어든 데 그쳤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11개월째 70만 명 내외의 감소폭을 지속해 왔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장기간 10만~20만 명 내외 감소를 기록해 온 숙박·음식업 종사자 감소폭도 3만1000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하반기 경기반등 지속을 위해서는 현재 고용 수준 개선세를 유지하면서 투자 확대가 추가적인 고용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청년 일자리 문제' 함께 풀어요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우수 중소기업 온택트 채용동향 설명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산업융합에 올 3.6조 투입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속도

### 그린뉴딜·비대면 등 예산 절반

산업 디지털 전환, 메가 트렌드 대응, 융합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등 산업융합 발전을 위해 올해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총 3조5929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1개 부처에서 163개 사업을 추진하는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2021년도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추진을 위해 산업부 1조1350억 원, 국토교통부 7049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5317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77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과제 발굴,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및 클라우드 기반

AI 제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1조11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메가 트렌드 대응을 위해선 탄소중립 R&D전략수립, 미래형 차 검사기술 개발, AR·VR 비대면 실감 콘텐츠 개발 등에 나선다. 예산은 4110억 원이다.

융합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물공급·순환 연계 융복합 시스템 개발, 융합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등에 1조8080억 원을 들인다.

올해는 국가 주요 정책 과제인(디지털 뉴딜 1조1429억 원), 그린 뉴딜(4410억 원), 비대면 혁신(2532억 원)에 총 예산액의 51.1%가 투입된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2021년도 실행계획을 통해 민간의 산업융합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고 K 뉴딜의 성과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 5차 재난지원금, 추석前 전국민에 지급하나

### 세수확대로 실탄 마련 부담 없어 당정, 선별 지원서 선회 가능성 "2차 추경편 경제에 특급 윤택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추석 연휴 전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주식투자가 늘면서 법인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수가 크게 확대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실탄 마련에는 큰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1일 "올해 세수는 3·4분기에는 1분기보다 다소 줄겠지만 연간으로는 30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282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지금 추세대로 가면 3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국제 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 원 늘었다.

올해 세입이 300조 원을 넘어선다면 세입 예산 대비 17조 원 이상 초과 세수를 의미한다. 1차 추경으로 이미 14조9000억 원을 쓰긴 했지만, 초과 세수 규모가 커 2차 추경 편성 재원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시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데 발맞춰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한국 경제에 특급 윤택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

다. 그러나 올해 4% 성장률 달성을 위해 추경 카드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6월 중하순께 발표할 예정인데 추경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주장했던 선별 지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도 선별 지원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1차처럼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 재난지원금은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데에도 어려운 가계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에도 실패했다"며 "경기 회복을 확산시키고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주유소내 연료전지 구축 가능해진다

### 반려견 위한 피자·삼계탕 배달 허용 등 규제 특례 21건 통과

주유소 내 연료전지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 등 분산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 실증 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 등이 입증되면 전국 주유소가 자동차 유류 및 전기 충전은 물론 전력 공급의 점조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서비스 등 21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주유소 유희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 금천구 박미주유소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지점 주유소로 테스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특례위는 소방청에서 제시한 사전 위험성 평가, 신청기업이 준비한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산에 따른 공급 대비와 함께 연료전지 등 분산전원 보급 활성화를 계통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특성에 삼계탕,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서비스 실증특례도 통과됐다. 사료 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만 사용하는 등의 농식품부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반려동물 즉석조리 메뉴는 스테이크, 버거, 피자, 삼계탕, 곰탕, 볶음밥, 샐러드 등 7개를 서울시 한해 허용했다.

산업부는 올해 9월까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실증 사업비와 책임보험료, R&D, 펀드·보증 등 금융 등 규제특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 中 “세 자녀 허용” 산아제한 사실상 폐지

2016년 2자녀 허용 이후 추가 완화  
생산가능인구 2013년 대비 4% 줄어  
인구절벽 대응 단계적 정년 해제도

14억 명의 인구 대국인 중국이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산아제한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당 총서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가족계획 정책 개선 및 장기적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쌍의 부부가 셋째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구체적인 정책 시행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산아제한을 완화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과거 수십 년 동안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가, 지난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해 왔다. 중국이 5년 만에 인구 정책에 변화를 준 것은 그만큼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커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단순히 제한을 푸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인구 변화에 발맞춰 각종 정책과 제도 또한 재정비하고 나섰다. 당국은 보육 서비스를 완비하고 가정 교육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이는 많은 부모들이 높은 주거 비용과 교육비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언급하고 나선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출산 휴가 및 출산 관련 보험 등 복지제도도 확충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단계적 정년 해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정치국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이는 14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중국에서는 최근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시화한다는 우려가 부상했다. 가파른 인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생산성 감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번 정책이 인구구조 개선 및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력 자원의 이점을 지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언급됐다.

실제로 최근 통계는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11일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인구 총조사 결과에서 본토 인구가 14억1178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5.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53년 해당 통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저조한 증가세다.

생산성과 직결되는 출생 인구와 고령층 증가율도 심상치 않았다. 지난해 중국 본토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약 1200만 명으로,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숨진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사이의 인구는 지난해 9억6776만 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2013년 대비 3.8%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이상 고령층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60%에 달했다.

블룸버그는 증가세 둔화로 인해 중국이 오는 2025년 이전에 인구 수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3자녀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는 “2016년 도입한 2자녀 정책도 출산율 하락을 되돌리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산아제한 완화가 인구의 실질적인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효선 기자 hsbun@



뉴질랜드 홍수로 비상사태 31일 뉴질랜드 캔터베리 주에 홍수가 나 한 농가와 건물이 물에 잠겨 있다. 뉴질랜드는 폭우로 애슈버턴강이 범람하고 인근 지역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면서 수백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다. 애슈버턴 시장은 지역 주민 절반이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캔터베리 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캔터베리/AP연합뉴스

## 美 제조업 “관세철폐” 요구에 “더 높인다”는 바이든

“트럼프 정책 인플레이션 주범” 주장  
美 상무부 “加 관세율 상향” 예고

미국 제조업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철폐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제조업계는 트럼프 전 정권 시절 부과된 관세에 계속 반대해왔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나타난 공급 병목현상과 관세가 맞물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폐지를 위한 노력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4.2% 급등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뒤덮었다. 실제 철광석, 목재, 원유, 자동차 등 모든 제품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300개 이상 미국 제조업체들은 5월 초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철강 관세 25%, 알루미늄 관세 10%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청했다. 당시 서한에 서명했던 금속가공업체 B.월터앤드컴퍼니의 스킷 부허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9월 이후 철강 공급업체로부터 15차례나 가격 인상을 통보받았다”며 “철강 가격이 하늘을 찌르는 데 관세가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국내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일부 철강 제품은 유럽보다 40% 이상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입 제품에 관세 폭탄을 퍼부었다. 2000개 이상의 중국산 품목에 관세를 매겼고 2017년 캐나다산 목재에 최고 24% 관세를 부과했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제조원가 상승을 날

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며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제조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로버트 디에츠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40명도 4월 바이든 행정부에 2000여 개 항목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 부활을 요청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도입한 해당 절차는 지난해 12월 만료됐다.

관세 철폐 목소리에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어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캐나다산 목재에 부과했던 관세율을 종전의 9%에서 18%로 높이겠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전 정부가 지난해 말 관세율을 낮췄는데 다시 올리려 하는 것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에르도안 부패 스캔들’ 잠재우기 터키, 17조 규모 운하 건설 착공

터키가 이달 150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운하 건설을 시작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사진) 터키 대통령은 전날 6월 말 운하 착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운하는 45km 길이로, 흑해와 마르마라해를 연결할 예정이다. 건설 자금만 150억 달러가 투입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운하 건설로 수천 개의 일자리와 부를 창출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교통량과 사고 위험 부담을 덜어내려는 조치다.

블룸버그는 2023년 대선을 앞두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반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했다. 에르도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민심을 많이 잃었다. 취임한 지 4개월 된 중앙은행 총재를 자신과 다른 방향의 정책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등 시장을 불안하게 했고, 그 결과 3월 총재 해임 후 미국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는 13% 이상 하락했다.

시장 불안에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4월 48%에서 올해 5월에는 32.3%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며 집권당 지지율 역시 50%를 밑돌고 있다. 블룸버그는 “대통령은 높은 금리가 인플레이



유발한다는 비전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며 “2년 새 3명의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마피아가 연루된 부패 혐의까지 공개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마피아 조직 보스인 세타 페커는 유튜브를 통해 전·현직 의원들의 부패와 마약 밀매, 성범죄 등을 폭로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을 뒤흔들고 있다. 현재 페커는 터키에서 도망쳐 아랍에미리트(UAE)에 거주하며 폭로 영상을 연달아 게재 중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8년 통치 기간 이스탄불 신공항과 보스포루스 대교, 대규모 병원 등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에만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경기침체와 부패에 실망한 시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운하 건설이라는 카드를 새롭게 꺼내 든 것이다. 신설될 운하에는 여러 대교와 함께 50만 명 규모의 신도시도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 운하 양쪽에 두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스탄불의 아름다움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中 10대 IT 기업, 3개월 만에 시총 890조 증발

당국 규제 리스크가 상승 발목, 2월 고점 대비 시총 30% 급감

중국 주요 10대 IT 기업 시가총액 총합과 애플 시총 추이

(단위 : 조 달러) ※출처: 닷케아시아



못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메시징 앱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다. 2월 760억달러를 웃돌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주가는 5월 중순 580억달러까지 떨어졌다. 텐센트는 지난주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477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실적 호조가 주가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텐센트 주가는 2월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5월 초 텐센트를 직접 겨냥해 앱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알리바바는 1분기 순손실과 함께 대규모 반독점 규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중국 당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자국 IT 기업에 대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2월 새로운 반독점 규제를 공개했다. 인민은행 등 금융당국은 4월 말 전자상거래업체 JD닷컴과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판 등 13개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를 소환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미해결 문제를 수정하라는 새 지침을 내렸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투기과열지구는 60%〉

# 7월부터 무주택자에 집값 70%·최대 4억 대출

LTV 우대 폭 10%P→20%P 상향  
투기과열지구 9억 주택까지 혜택  
첫 집 장만 소득기준 1억으로 완화  
청년층 전월세 대출 1억 지원

##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및 혜택 개선 사항

	현행		개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주택기준	생애최초구입자 9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8억 원 이하

오는 7월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우대폭이 20%포인트(P)로 늘어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60%(조정지역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의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도 완화된다. 예컨대 연소득 8100만 원인 차주가 투기지역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 주담대 한도는 2억4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LTV 20%P 우대혜택을 받으면 3억6000

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 무주택자 대출, 집값·소득 요건 완화 = 무주택자 LTV 우대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 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1억 원 미만)하

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낮춘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 시 LTV 우대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우대폭을 늘렸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 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연소득 8100만 원인 차주가 투기지역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 주담대 한도는 2억4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LTV

20%P 우대혜택을 받으면 3억6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했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에는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했다.

◇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한다. 주담대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 원으로 3000만 원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소득 등 기타 요건은 부합하나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5000명(4000억 원)이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억 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 상품과 비교해 매년 50만 원(약 0.5%포인트)의 이자가 줄어들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 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 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000억 원) 제한을 폐지한다. 주담대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 원에서 7억 원(비수도권 3억~5억 원)으로 확대된다. 주담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라간다.

보급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과 보급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담대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담대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된다.

박진산 기자 jinsan@

## 통매각이나 분리매각이나, 씨티銀 두번째 이사회

3일 '소매금융 철수' 관련 논의  
카드·자산관리 업체 문의 지속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 일정	
4월 15일	미국 씨티그룹, 영성희씨 한국 소비자금융시장 철수 계획 발표
27일	한국씨티은행, 1차 이사회
5월 9일	한국씨티은행, 통매각 우선 추진 발표
25일	현대카드, 씨티카드 인수 추진 기사 보도
28일	현대카드, 씨티카드 인수설 공식 부인
6월 3일	한국씨티은행, 2차 이사회

통매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카드부문 등을 분리해 매각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씨티카드는 프리미엄 마일리지 카드를 쓰는 우량 충성고객이 많고, 리볼빙에도 강점이 있다. 때문에 최근 현대카드가 씨티카드를 인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현대카드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외형성장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씨티카드 인수 의사가 없다"고 부인한 상태다.

현대카드 인수설이 사실상 물 건너 가지 다른 업체들도 시큰둥하다. 씨티카드를 인수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씨티카드의 고객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중복고객을 고려하면 씨티카드를 인수한다고 해도 시장 점유율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이다. 강점으로 꼽히는 마일리지 카드도 의견이 분분하다. 카드사 입장에서 혜택이 좋은 마일리지카드 상품은 '비용이 많이 드는 카드'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의 인력구조도 부담이다. 씨티은행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기준 1억1200만 원으로 은행권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시중은행 대부분이 노사 합의로 폐기한 퇴직금 누진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의 가치가 최대 1조5000억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부담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한편, 아직까지 한국씨티은행의 영업점 폐쇄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통상 은행연합회 회원사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은 지점을 폐쇄하려면 금융위원회에 폐쇄 접수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실사를 나가고 금융위가 최종 인가하는 순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전국 영업점 수는 36개다. 김범근 기자 nova@

## 금융위, 기업·하나은행 기술금융 우수 평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소형은행 그룹에서는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및 자체평가 역량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TECH 평가는 반기별로 은행권의 △기술 금융 공급실적 △지원역량 등을 평가해 산출한다. 평가지표는 공급규모 등의 정량지표와 인력·조직 등의 정성지표로 나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각각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면 금융연구원에서 검증한 뒤 TECH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기업은행은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혁신성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은행의 기술금융대출 평가액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52조4000억 원으로 그해 상반기(46조2000억 원)보다 6조 원 이상 늘었다. IP담보대출 실적도 지난해 하반기 2126억 원으로 상반기(769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남은행은 기술평가 기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점이 평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됐다. 경남은행의 투자 순증액은 지난해 하반기 84억5000만 원(+63.0%)으로 상반기 12억2000만 원(+10.0%)보다 증감률이 53%포인트 상승했다. TECH 평가와 함께 별도로 신청한 10

개 은행에 대해 자체 기술금융평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도 심사 대상이 됐다. 심사 결과의 레벨이 향상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결과 레벨4에 농협은행이 신규로 진입해 총 9개 은행의 자체 기술금융평가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 진입 은행은 대흥은행에서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농협은행 등 총 6개 은행이, 소형은행에서 부산, 대구은행이, 기타은행에서 산업은행 총 9개 은행이다.

금융위는 "올해에는 기술금융 체계를 세부적으로 정비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은행 자체 기술평가 역량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술평가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여신심사에 내재화 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산 기자 jinsan@

**P2P 금융업체, 온투법 등록 신청 현황**

- 14곳 인형**  
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 오션펀딩, 와이펀드, 링크스톤파트너스, 투게더펀딩, 펀다, 어니스트펀드, 헬로펀딩, 나이스abc, 모우다, 나인티에스, 리딩플러스
- 10여곳 준비**  
금융감독원과 사전 컨설팅 진행

## P2P 등록 신청 사실상 마감 업체 5곳 중 4곳 참여 안해

8월27일 '온투법' 본격 시행  
약 100곳 폐업·사업전환 전망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 가운데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을 신청하는 곳이 최종 2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본격적인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라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의 심사 기간이 2~3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마친 업체들만이 사실상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P2P금융은 개인 투자자와 차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돈을 빌려 주고, 빌려 쓰는 혁신금융의 모델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14곳의 P2P업체가 정식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 오션펀딩, 와이펀드, 링크스톤파트너스 등 6개 업체가 등록 신청을 했으며, 이어 5월을 전후해 투게더펀딩, 펀다, 어니스트펀드, 헬로펀딩, 나이스abc, 모우다 등 8개 업체가 등록 신청을 냈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의 제도권 유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달 말까지 일괄 접수를 받기로 하며 추가로 10여 곳의 업체가 금융감독원과 사전 컨설팅 형식으로 서류 검토와 면담 등을 진행하며 정식 등록 신청을 하려고 준비했다.

본격적인 법 시행까지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120여 곳의 P2P 업체 중 등록 심사를 신청한 곳은 17%에 불과한 셈이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추가로 정식 등록하는 업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투법이 1년 유예를 끝내고 8월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어 자진 폐업이나 일반 대부업체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가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식 등록을 신청한 업체들도 초조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등록 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빠른 올해 초 제도권으로 들어온 '1호' P2P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심사지연으로 인해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P2P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빨라야 다음 달에야 1호 등록 업체가 나올 것으로 보이나, 이마저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심사가 지연에 된 배경으로 신청 업체들의 서류 보완과 대주·신청인 요건의 사실 조회 등에 시간이 걸렸고, P2P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법적 이슈도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P2P 업체는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한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아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았고,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약없이 등록 심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P2P 업체들은 새로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KT는 AI로 교통을 제어하는 C-ITS 서비스로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적의도로로 도시를 바꾸다



구급요원 아저씨, 감사합니다!

KT-C-ITS의 긴급차량우선신호서비스는 빠른 이동이 필수적인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부여하여 혼잡시 소요시간을 줄여줍니다.  
 제주도에서 구급차이동시간을 2분 3초 단축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전국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1588-0114

# ‘쓰리高’에 신음하는 車업계

1 2분기 반도체 부족 심화  
“채고 확보 위해 10% 웃돈 줘야”

차량용 반도체에 이어 원자재 가격, 해상운임까지. 자동차 업계가 치솟는 세 가지 가격에 시달리고 있다. ‘3高’ 현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반등에 나선 업계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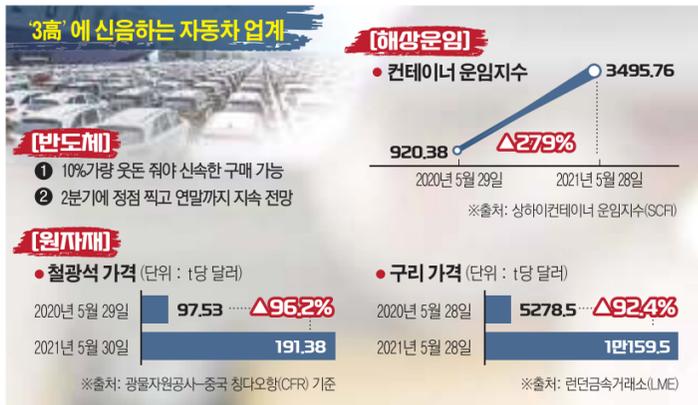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는 2분기에 접어들며 심화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는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재고를 확보하려 시도 중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반도체 대신 가격이 더 비싼 제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NXP, 르네사스, 인피니온 등 반도체 업체에 정상가보다 10%가량 높은 가격을 지급해야 신속한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5-6월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정점에 달할 전망”이라 설명했다.

한국지엠(GM)이 가동률을 50%로 낮춰 운영하던 부평 1공장을 이날부터 100% 정상 가동하고, 현대차도 조립을 재개하자 시장에서는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된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업계에선 반도체 부족 여파가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철광석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도 완성차 업계에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 항 기준(CFR)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 2 구리값 사상 최고치 경신 판매가 인상 실적 역효과 우려

5월 톤(t)당 91.63달러였지만, 이달 12일에는 237.57달러까지 치솟았다. 1년 전 톤당 5000달러 수준이던 구리 가격은 현재 1만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포스코와 현대차는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톤(t)당 5만 원 올리기로 이날 현대차-기아와 합의했다.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인상된 건 2017년 하반기 이후 4년 만이다.

철광석과 구리는 자동차 생산의 핵심적인 원료다. 특히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보다 4배 이상 많은 구리가 필요하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 자칫 제조사의 전동화 전환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이유다.

생산 원가가 올랐지만, 완성차와 부품업체는 제품 가격 인상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원가 인상을 판매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완성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치솟는 해상운임도 또 다른 변수다.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최근 4주 연속 상승해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IA)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1~3차 협력사 48.7%는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심하다”라고 응답했다.

그나마 완성차 업체는 해상 운임 급등에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을 받고 있

## 3 SCFI 4주 연속 상승세 협력사 50% “물류비 부담 심각”

다.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맺는 컨테이너선과 달리 완성차 운반선(PCTC)은 2년가량의 장기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해상 운임이 올라도 물류비에 즉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선보다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해상 운임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운송료 인상이나 물류 차질에 관한 우려도 제기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 뜨거워진 컬러강판 경쟁 속도 내는 포스코의 추격전

포스코강판 ‘인피넬리’ 상표 출원  
신제품 출시로 점유율 확대 박차

포스코가 최근 급성장하고 컬러강판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신제품을 출시한다. 컬러강판은 열연강판에 표면처리를 해 색깔을 입힌 강판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강판은 최근 특허청에 ‘인피넬리’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해당 상표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컬러강판 상표명이다”라고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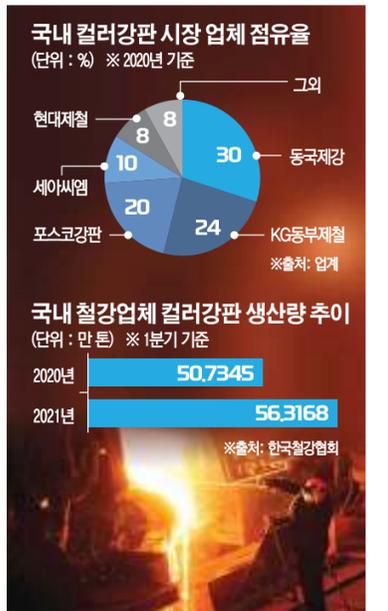
포스코강판은 포스아트, 포스마블 등 다양한 컬러강판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포스아트는 철강재에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고해상도 강판이다. 기존 프린팅 강판보다 네 배 이상 선명하다.

포스코강판이 신제품을 선보이는 것은 증가하고 있는 컬러강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가전, 건설 등 전방 사업들이 살아나면서 컬러강판을 찾는 업체들이 많아졌다. 컬러강판은 고급 가전과 건축 내외장재에 주로 쓰인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철강사들의 컬러강판 생산량은 56만3168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포스코의 낮은 점유율도 신제품을 출시한 이유 중 하나이다. 국내 컬러강판 시장은 동국제강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KG동부제철이 뒤쫓아가고 있는 형



국이다. 포스코강판은 3위에 머물러 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동국제강, KG동부제철에 계속 밀릴 위험에 처한 것이다.

포스코강판의 적극적인 행보로 컬러강판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철강시장조사업체 글로벌인포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컬러강판 시장 규모는 2019년 24조 원에서 2024년 33조 원으로 확대된다.

가격 역시 강세다. 건축 자재용 컬러강판 가격은 이달부터 톤당 20만원 인상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컬러강판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신제품에 대한 고객사들의 반응 등에 따라 업체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기아 디자인담당 전무〉

## 카림 하비브 “5세대 스포티지, 자연적 감성·모던함 반영”

“기존 모델보다 차체 키워 웅장함  
고객 영감 주는 디자인 구현 노력”



기아 ‘5세대 스포티지’ 티저 이미지.

기아 베스트셀링 SUV인 스포티지가 6년 만에 5세대로 거듭난다. 출시를 앞두고 부분 이미지도 공개한 가운데 디자인담당 카림 하비브(Karim Habib) 전무는 “영감을 주는 움직임”을 강조했다.

31일 카림 하비브 기아 디자인담당 전무는 본지와 주고받은 스포티지 디자인과 관련한 메시지에서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지트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바탕으로 자연적 감성과 모던함을 반영했다”라며 “강렬한 인상이 느껴지도록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아 스포티지는 1993년 데뷔한 준중형 SUV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누적판매 600만 대를 돌파한 효자 모델이기도 하다. 하비브 전무는 2019년 기아에 합류했다. 선행 디자인 이후 단계부터 5세대 스포티지 최종 양산까지 그가 디자인을 주도했다.

기아는 신형 스포티지의 외관을 두고 “기존 모델보다 차체 크기를 키워 스포티하면서도 웅장함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입체적인 볼륨을 더해 전체적으로 안정적 균형감이 느껴지도록 했다.

이런 디자인 변화의 배경에는 올해 초 기아가 확정해 발표한 브랜드 방향성이 존재한다. 기아는 자동차에서 벗어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공언하면서 자동차 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해 “영감을 주는 움직임”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하비브 전무는 “고객에게 영감을 주는 디자인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모델을 개발 중”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LG디스플레이, 무신사에 투명 OLED 공급

LG디스플레이는 최근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오픈한 첫 플래그십 스토어 ‘무신사 스탠다드 홈데’에 인테리어용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공급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장 내 설치된 55인치 투명 OLED 소원도는 각종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소원도 속 실제 제품에 가상의 이미지를 겹치는 방식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표현하여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매장 곳곳에는 LG디스플레이와 무신사, 그리고 유명 뮤직비디오 감독 룰렌스가 협업해 제작한 투명 OLED 미디어 아트 작품도 전시해 쇼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최근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오픈한 첫 플래그십 스토어 ‘무신사 스탠다드 홈데’에 인테리어용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공급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장 내 설치된 55인치 투명 OLED 소원도는 각종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소원도 속 실제 제품에 가상의 이미지를 겹치는 방식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표현하여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매장 곳곳에는 LG디스플레이와 무신사, 그리고 유명 뮤직비디오 감독 룰렌스가 협업해 제작한 투명 OLED 미디어 아트 작품도 전시해 쇼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 LG, 32인치 게이밍 모니터 ‘울트라기어’ 출시

LG전자가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선보이며 비대면 수요를 공략한다.

LG전자는 1일 32인치(대각선 길이 80cm) 대화면 게이밍 모니터(모델명 32GP850)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지난 5월 초 27인치 게이밍 모니터를 선보인 후, 약 한 달 만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대면 수요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게이밍 모니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국내 게이밍 모니터 시장은 2018년 약 13만 대에서 지난해 36만 대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신제품은 32인치 QHD(2560 x 1440) 대

화면의 ‘나노 IPS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나노 IPS 디스플레이’는 나노미터(1nm=10억 분의 1m) 단위 미세 입자를 백라이트에 적용, 정확하고 풍부한 색을 표현한다.

LG전자는 1ms GtG(Gray to Gray) 응답속도를 구현, 빠른 화면 전환으로 생길 수 있는 잔상도 최소화했다. 여기에 오버클럭 시, 초당 최대 180장의 화면을 보여주는 180Hz(헤르츠) 고주사율을 더해 이 제품으로 게임을 즐기는 고객은 최적의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품은 디지털 영화협회(DCI·Digital Cinema Initiatives)의 표준색 영역 ‘DCI-P3’를 98% 충족한다. 출고가는 79만9000원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르노삼성, 車 구독서비스 출시

르노삼성자동차가 6월 전속합부금융사인 르노캐피탈(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을 통해 자동차 구독서비스 ‘모빌라이즈’를 출시한다.

모빌라이즈 구독서비스는 르노삼성과 르노 브랜드 모델(ZOE) 중 1개 차종을 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단독형 상품과 2가지 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 교체형 상품으로 구성됐다. 교체형 상품은 XM3, SM6, QM6 등 3개 차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 삼성중, 4170억 규모 LNG 운반선 2척 수주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총 4170억 원에 수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2024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이 이번에도 수주한 선박은 연비를 높이는 최신 친환경 스마트십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4척, 54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의 59%를 달성 중이다. 대우조선해양도 이날 국내 액화천연가

스(LNG) 전문 선사인 현대LNG해운으로부터 대형 LNG 운반선 1척을 약 2169억 원에 수주했다. 이 선박은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3년 4분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17만4000㎥ 대형 LNG 운반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총 26척 약 27억4000만 달러 상당의 선박을 수주해 목표 수주액(77억 달러)의 약 35.6%를 채웠다. 이주혜 기자 winjh@

# 롯데케미칼-SK가스, 수소충전소 100곳 짓는다

## 연내 합작사 설립

롯데케미칼과 SK가스가 올해 안에 수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작사(JV)를 설립한다.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31일 경기 판교에 있는 SK가스 사옥에서 수소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BU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 윤병석 SK가스 대표, 김철진 SK어드밴스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이후 양사는 올해 안에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양사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기체수소 충전소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에 나선다. LNG 냉열을 활용해 생산된 액화수소를 공급하는 등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사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사는 합작사 설립 후 울산 지역에서 부생 수소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생수소는 주로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를 말한다. 생산과

## 수소사업 공동 추진 협약 체결

양사 네트워크·가용 자원 동원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 등 착수 "미래지향 포트폴리오 완성할 것"

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고 경제성이 높아 초기 수소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국내 3개 생산기지(여수·대전·울산)에서, SK가스는 울산에 있는 관계사인 SK어드밴스드에서 저탄소 부생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합작사는 부생수소 수요 창출을 위해 수소 충전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사업은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SK가스가 가진 LPG충전소 네트워크, 롯데의 물류·부지 자원 등을 활용해 어렵지 않게 추진될 전망이다.

합작사는 이후 LNG 냉열을 활용해 생산된 경쟁력 있는 액화수소 공급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수소충전소 약 100개소를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은 울산에 있는 양사의 자회사와 자원을 활용해 추진된다. 울산지역은 이미 수소 파이프라인이 구축돼 있어 수소 배관망 구축을 위한 별도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또 SK가스가 이미 광주광역시에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화학BU장은 "협력 사업이 양사가 추구하는 환경친화적 기업 가치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에너지 성장의 핵심축이 될 수소산업 초기 생태계 형성을 주도하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향후 친환경 수소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수소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수소 생태계 조성이 우선"이라며 "롯데케미칼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는 국내 수소 사업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사업인 LPG 사업에 LNG 사업과 수소 사업을 연결해 안정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dy@

## SK실트론, 작년 사회적가치 3053억 창출

### 영업익보다 20% 이상 웃돌아



SK실트론 구미공장.

SK실트론이 지난해 총 3053억 원의 사회적 가치(SV)를 창출했다고 31일 밝혔다. SK실트론은 올해로 3년째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을 발표했다.

사회적 가치는 △고용, 배당, 납세 등 기업 활동을 통해 국내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수치인 경제 간접 기여성과 △제품·서비스 개발, 생산, 판매를 통해 발생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사회 성과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구성원 자원 봉사 등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사회 공헌 활동을 뜻하는 사회공헌 사회 성과까지 크게 3개 분야로 나뉜다.

SK실트론은 지난해 영업이익인 2494억 원을 20% 이상 웃도는 규모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 간접 기여성과 3526억 원, 비즈니스 사회성과 △564억 원, 사회공헌 사회 성과 91억 원이다. 경제 간접 기여 성과와 비즈니스 사회성과는 각각 전년 대비 93억 원, 103억 원 감소했다. 사회공헌 사회 성과는 전년 대비 80억 원 증가했다.

한편 SK실트론은 비상장사임에도 올해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우리 기자 we1228@



송명준(왼쪽) 현대오일뱅크 경영지원본부장과 배영진 한국남동발전 신사업본부장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 현대오일뱅크

## 오일뱅크-美 에어프로덕츠 블루수소 생태계 구축 박차

현대오일뱅크가 블루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31일 현대오일뱅크는 원유 정제 부산물과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매년 10만 톤(t)의 수소를 만들고 운송·발전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소 기업 에어프로덕츠와 '수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어프로덕츠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수소 생산 업체다. 천연가스와 정유 부산물 등 여러 원료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원천 기술을

### 원유 정제 부산물·천연가스 활용 年 10만톤 생산·운송 사업 추진

갖췄다. 공장 운영 노후와 수소 액화 등 저장, 수송 관련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블루수소란 화석연료가 수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를 제거한 친환경 에너지다.

현대오일뱅크는 2025년까지 블루수소 10만 톤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에어프로덕츠의 제조 기술을 활용해 저렴한 원유 부산물과 직도입 천연가스로 수소를 생산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한다. 수소는 자동차와 발전용 연료로 공급하며 탄소는 별도 설비를 통해 친환경 건축 자재인 탄산칼슘과 드라이아이스, 비료 등으로 자원화한다.

그린 수소 사업 모델도 개발한다. 그린수소란 제조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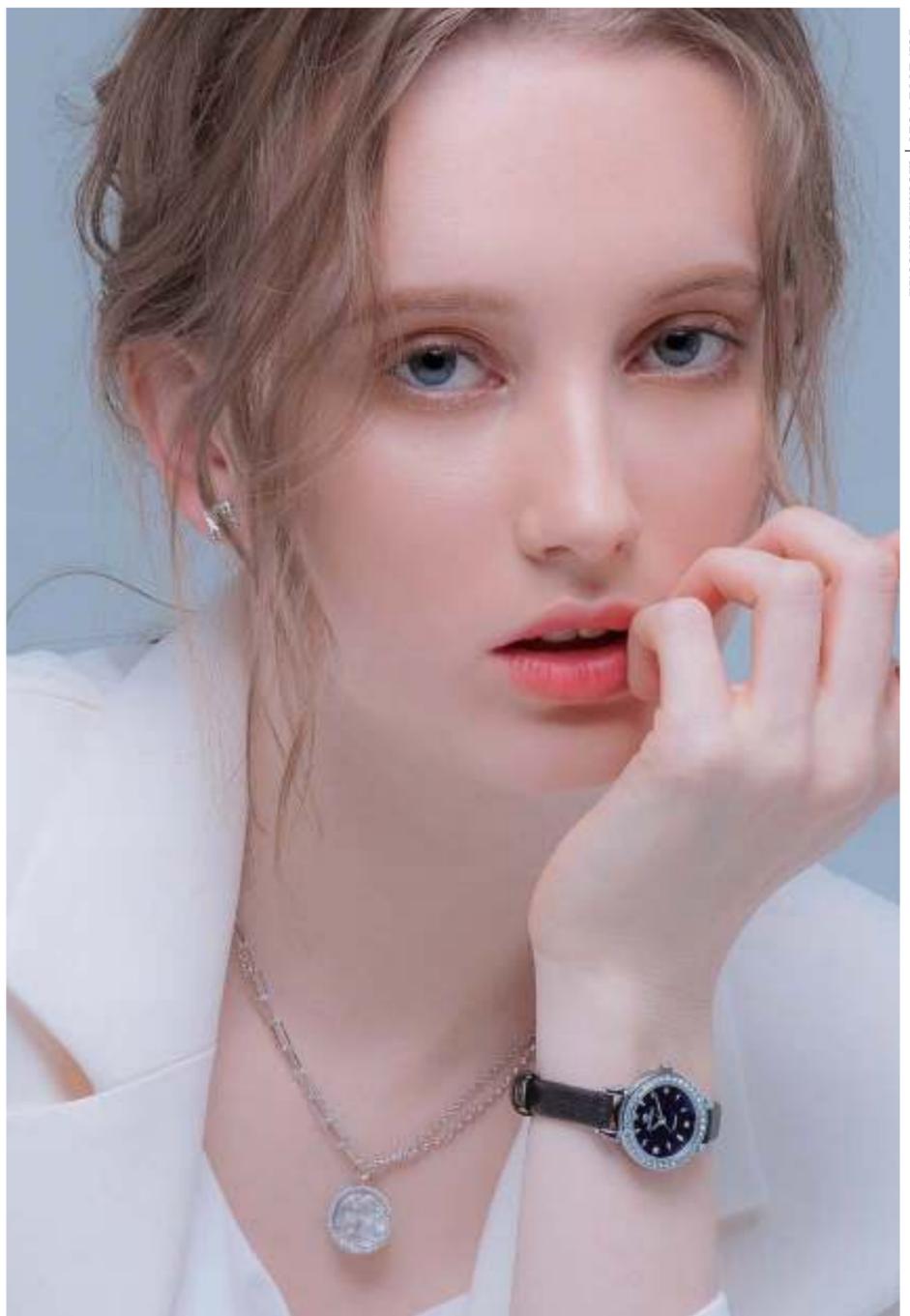
에어프로덕츠는 지난해 7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해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네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질소와 수소로 이뤄진 암모니아는 분해 과정에서 탄소가 생기지 않고 수소로 바뀐다. 현대오일뱅크는 암모니아를 활용한 그린수소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수소발전 시장도 진출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한국남동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양사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공동 추진을 검토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수소를 생산해 공급하고, 한국남동발전은 연료전지 발전소 운영 노하우를 제공해 합작 발전 법인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여기서 만드는 전기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에 따라 선정되는 의무 구매자에게 공급,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국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용량은 현재 650MW(메가와트)의 약 12배 수준인 8GW(기가와트)로 늘어나며 연간 시장 규모는 약 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대오일뱅크는 2030년까지 블루수소, 화이트 바이오, 친환경 화학·소재 사업 등 3대 미래 사업의 영업이익 비중을 70%로 높일 계획이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Tel. 1661-9316 | dieuamour.co.kr



DIEUAMOUR No. 3101 Bellezza Line

# CJ ENM “K콘텐츠 5년간 5조 투자, 글로벌 승부”

티빙, 2년 내 콘텐츠 100여편 제작... 가입자 800만명 목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공급 계획... 사용료 인상 속제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티빙을 자회사로 둔 CJ ENM이 5년간 5조 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입한다. 티빙은 2023년까지 800만 유료 가입자 확보로 목표를 상향했다.

CJ ENM은 31일 서울 마포구 삼양동 CJ ENM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는 올해만 8000억 원, 향후 5년 동안은 5조 원 규모 이상의 콘텐츠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작년엔 분사한 티빙을 포함해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 등이 집행하는 투자 금액이 포함됐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협업 확대 = CJ ENM은 티빙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에도 콘텐츠를 계속 공급할 예정이다. 강 대표는 CJ ENM

이 K콘텐츠의 핵심 전진기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ENM은 처음부터 글로벌화를 비전으로 삼았다”며 “네트워크와 제작 거점을 이미 만들었고, 과감하게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수익보다 그들의 정서를 파악했고,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뚫어야 하는지 감을 배웠다”며 “이 때문에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저희에게 연락이 오는 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티빙 역시 K콘텐츠를 들고 글로벌로 진출한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글로벌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양지를 티빙 공동대표는 “유수의 플랫폼 업체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우선 K콘텐츠로 해외에 진출할 예정이며, 이후 현지에 인기 있을 만한 로컬 콘텐츠를 로컬라이즈화할 계획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티빙, ‘K콘텐츠 맛집’ 1위 = 티빙은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가 31일 CJ ENM 센터에서 열린 ‘CJ ENM 비전 스트림’ 기자간담회에서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CJ ENM

2023년까지 약 100여 편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80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발표한 2023년 유료가입자 500만 명 확보 목표에

서 300만 명가량 늘어난 규모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공세 속에서 티빙은 1위 ‘K콘텐츠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이명한 티빙 공동대표는 ‘K콘텐츠 맛집’이라는 특징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의 OTT 사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돈과 계획은 누구나 언급할 수 있지만, 실행은 다른 것”이라며 “티빙은 검증된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내 1위 사업자로 포지셔닝 하려면 ‘K콘텐츠 맛집’이라는 포지션 없이 힘들다”며 “‘K콘텐츠 맛집은 저희’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한국 대중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는 제작하는 집단이며, 대한민국 대중에게 어필할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고, 공급, 기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콘텐츠 사용료 인상 필수 = 이날 간담회에서는 콘텐츠 시장의 유통과 분배 구조 선진화를 위해 콘텐츠 사용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CJ

ENM은 IPTV 사업자들과의 협상에서 전년 대비 약 25%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IPTV사들은 이에 대해 과도한 인상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강호성 대표는 국내 IPTV 업체들이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는 수신료가 미국 대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IPTV사에 공급을 하고 방송 제작비 3분의 1 정도를 수신료로 받는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작비의 110~120%를 수신료로 받는다”며 “미국은 이미 수신료로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지만, 우리는 늘 불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강 대표는 결국 콘텐츠 사용료 인상이 콘텐츠 시장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짚었다. 그는 “어디를 살리고, 어디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성장하기 위한 문제”라며 “콘텐츠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빨리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AI ‘카피킬러’가 논문·특허 표절 잡아내죠”

인터뷰 신동호 무하유 대표

“무하유는 인공지능(AI) 분야 내 사업적 성공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좋은 인재들과 AI 분야에서 사업적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신동호(사진) 무하유 대표이사는 31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현재 카피킬러는 400만 명이 사용하고 2500개 고객사가 도입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하유는 국내에서 유일한 AI 기반 클라우드 표절검사 기업(서비스명: 카피킬러)이다. 또한 AI 채용서류 평가 서비스 카피킬러HR도 대표적 서비스다. 컴퓨터 엔지니어인 신 대표가 직접 기술 개발을 주도했으며, 주요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신 대표는 동 대학원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인지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지능의 문제’를 연구했고 10년간 검색엔진 시장에서 엔지니어로 경력을 쌓았다.

그는 “확장시절인 1990년대는 인공지능의 빙하기였다”며 “‘인공지능은 안된다’, ‘인공지능은 실패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의 연구자들은 인공지능보다는 ‘지능의 본질’이 무



400만명 사용...60억건 비교검사  
딥러닝으로 참고 문헌까지 탐지

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탄생한 학문이 인지과학”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문제 해결 의식에 남다른 의견을 냈다. 정보의 양적 성장이 현대사회에서 ‘득’도 있지만 ‘실’ 또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2000년대 들어 10년 동안 ‘검색’에 관한 기술은 발전을 거듭했다”며 “하지만 정확히 많은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하유의 카피킬러 사업 아이디어는 검색된 정보를 대신해 읽고 이해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서류검토’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서비스에서 출발했다”며 “표절검사=카피킬러’라는 도식이 성립했으며, 국내에서 카피킬러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고 자신했다.

카피킬러는 논문, 특허, 인터넷 기사, 웹사이트 등 60억 건 이상의 빅데이터와 비교검사를 하며 다양한 문서파일(hwp, doc, docx, xls, ppt, pdf 등)을 인식한다.

핵심 기술은 딥러닝 기술을 적용, 표절이 아닌 영역을 탐지하고 있다. 그 대상은 본문뿐만 아니라 인용·출처문장, 목차·참

고문헌 영역 등까지도 포함한다. 국내 주요 대학, 공공기관이 논문 제출 시 카피킬러 표절검사 결과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만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피킬러에 이은 차세대 성장 동력은 카피킬러HR이다. 카피킬러HR은 자기소개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서비스다. 기본결함 검사는 기업명 오기, 맞춤법 오류, 중복문장 등 결합 내용 파악한다. 또한 블라인드 체커(인적사항 숨김 처리), 표절검사, 직무적합도, AI 평가 등의 서비스도 포함한다.

무하유는 앞으로도 서류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는 의미상의 유사도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카피킬러DS’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최근 텍스트 표현상의 일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표절검사는 파악할 수 없는 유사한 문서가 많이 작성되고 있다”며 “정부나 각 기관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구축형으로 제한된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유사도 검사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해 어느 기관이든지 쉽게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자사 기술의 발전 방향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인재 영입이 최근 고민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 kjm@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소편앤라이프쇼, 서울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을 찾은 시민들이 인테리어 가구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스

## 원자재 값 급등, 가구 가격 또 오르나

목재 수입가 7%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 특수를 누린 가구업계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고심하고 있다. 목재, 금속 등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부품 수입이 어려워진 가운데, 가구 업계는 판매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31일 대한목재협회의 4월 국내 수입 목재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입 가격이 전월 대비 평균 7.16% 상승했다.

원목뿐만 아니라 파티클보드(PB) 가격도 오름세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8000원 선에 머물던 PB 가격은 이달 초부터 1만 원을 넘어섰다. 또한 경첩이나 손잡이 등 가구 부품에 사용되는 금속·비금속 가격도 급등했다.

한 중견 가구업체 관계자는 “목재 가격이 오르니 합판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가격을 40~50%가량 올렸다”며 “최근 금속을 사용하는 경첩 등 일부 부자재의 경우 평균 5%가량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가구업계의 고민

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급 차질이다. 최근 ‘집콕’ 확산으로 가구를 교체하거나 인테리어 단장에 나선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수요만큼 물량을 댈 수 있을지 미지수란 것이다. 한 중소 가구업체 관계자는 “생산해야 하는 물량은 많은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따라서 가구업계는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가격을 올린 기업도 있다. 일몰은 6월 1일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5.9%씩 올리기로 했다.

앞서 가구업계는 원자재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한 차례 가격을 올린 바 있다. 4월 초부터 한샘과 시몬스침대, 에이스침대 등이 연달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당시 시몬스 침대와 에이스침대는 평균 8~15%를 인상했다.

다른 기업들은 당장은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예몬스 가구는 현재 출시된 제품보다 신제품 중심으로 가격 조정을 고려 중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 ‘이루다’ 사태 막을 AI 정보보호 점검표 나왔다

적법·안전성 등 6가지 원칙 제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는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공개했다. 점검표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때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안내서다.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단계별로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담았다. 6가지 원칙(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과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업무처리 단계별 주요 점검항목은 기획·설계에서 AI 서비스 특성상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기획 단계부터 사전 점검과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적용한다.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수집에서 인공지능 개발, 운영

시 대규모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적법한 동의방법, 동의 이외의 수집근거 확인, 공개된 정보 등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시 유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용·제공 부분에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내 이용·제공해야 하고, 목적 외 이용은 적법한 근거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보관·파기 △AI 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 보호 △자율보호 활동 △AI 윤리 점검 부분에서 단계별 체크 항목을 제시했다. 점검표는 개인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네이버 인증서 가입자 1000만명 돌파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네이버 인증서는 지난해 3월 처음 선보인 이후 1년 만에 400만 명을 넘었다. 이후 4월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800만 명을 넘어섰으며 5월 1000만 명을 넘어 인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네이버 인증서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비대면 방식, 편의성을 선호하는 2030 세대에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부문에서 많은 제휴처를 자랑하는 점을 바탕으로 네이버 인증서 이용자의 과반수가 MZ세대였다.

조성준 기자 tiatio@

# 불매에 기업 매각까지... 유통업계 '오너 리스크' 주의보

외손녀 마약사건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더해져 회사 매각  
정용진 SNS·구본성 보복운전... 개인 행동, 회사 피해로 직결

유통업계가 최근들어 잇따르는 '오너 리스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오너 리스크'는 재벌 회장이나 대주주 개인 등 오너(총수) 잘못된 판단이나 불법 행위로 기업이 피해 입을 것을 뜻한다. 사내에서 독점적인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을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기란 어렵다. 또 오너의 행동이 기업 이미지 추락과 주가 하락, 불매 운동, 심지어 기업 매각까지 불러일으키며 막대한 피해로 직결된다. 이는 특징이 있다.

사모펀드에 팔리며 57년 역사를 마감한 남양유업은 '오너 리스크'에 휘청인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2013년 이른바 '대리점 갑질 사태'로 휘청이기 시작한 남양유업에 2019년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사건이 터지며 꺼진 줄 알았던 불매 운동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흥 전 회장의 장남인 흥진석 상무는 최근 회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

혹을 받고 보직해임됐다.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빛어 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가 회사 매각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수년간 쌓여온 오너 일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회사 매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시로 개인 SNS에 글을 올리며 연예 언급으로 맹활약해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최근 게재한 게시물 문구가 논란을 빚으며 구설에 올랐다.

정 부회장은 지난 25일과 26일 인스타그램에 연이어 음식 사진을 올리며 "미안하다, 고맙다"는 코멘트를 달았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정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관련 발언을 따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팽목항을 찾아 "애들이.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인스타그램.

흔이 1천만 촛불이 됐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쓴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당시 정치권에선 사고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28일 게시물은 논란을 더 키웠다. 정 부회장은 소고기 사진과 함께 "너희들이 우리 입맛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고 적었다. 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2016년 세월호 분향소에서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고 쓴 것과 비슷하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신세계 계열사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오자 정 부회장은 코멘트를 일부 수정했다. 30일 게재한 음식 사진에는 "thank\_you, jang\_eo"라고 썼다.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보복운전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 창업주의 3남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자 아워홈 최대주주다.

구 부회장은 3월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을 운전

하던 중 다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끼여 들자, 이를 앞질러 급정거해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를 막아서자 차량으로 밀어붙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론은 마무리됐고 이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롯데그룹 역시 오너 리스크를 안고 있다. '형제의 난'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도쿄지방법원이 신동빈 회장 손을 들어줬지만 신동주 회장 측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히며 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가 점차 투명해지며 오너의 한 마디가 즉각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대"라며 "공정성"에 민감한 MZ세대가 소비 주체로 떠오른 만큼 SNS 등 개인 영역에서도 지금까지와 다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GS25 '젠더 논란' 포스터 디자이너 징계

조운성 사장 편의점 손 떼기로

GS리테일이 편의점 GS25의 젠더 논란을 야기한 포스터 디자이너를 징계했다. 아울러 조운성 사장은 편의점 사업에서 손을 떼고 플랫폼 비즈니스 BU에만 힘을 쏟기로 했다.

GS리테일은 최근 젠더 논란을 낳은 포스터를 만든 디자이너가 징계를 받았고, 마케팅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 비즈니스BU장과 편의점 사업부장을 겸했던 조운성(사진) 사장은 7월 1일부터 편의점 사업을 전락 및 미래사업, DCX(디지털 고객경험) 등 기획 업무를 맡았던 오진석 부사장에 물려준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조 사장은 플랫폼BU만 맡기로 했다. 7월 1일부로 적용된다"며 "해당 디자



이너는 징계를 받았지만 세부 내용은 개인적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수위를 밝힐 수는 없다. 다만, 해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GS25는 캠핑용 식품 판매 포스터의 손가락 모양에 대해 여성 중심 커뮤니티 메갈리아 등에서 한국남성의 성기를 비하할 때 쓰는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곧바로 조 사장이 "관련자 모두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과거 홍보 내용까지 들춰지는 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젠더 이슈 직후 등장했던 'GS리테일의 군부대 PX 계약을 전면 철회해주시요'

라는 청와대 청원은 현재 10만 명을 넘어섰다. 25일 출시한 장어·갈비·매로구이 도시락은 앞글자를 따 매갈장(짱)을 표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수제맥주 4캔에 7200원' 판매라는 파격 행사를 벌이고 있는 'GS프리미엄워크'에도 남성 혐오 표현이 들어있다는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디자이너와 마케팅 팀장의 징계와 함께 조 사장의 인사는 정기 인사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28일 주중에서 GS홈쇼핑과의 합병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GS리테일의 합병 시너지 제고 및 미래성장을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GS리테일은 조직 개편의 큰 방향은 양사 비즈니스 영역을 3개 비즈니스 유닛(Business Unit)으로 재편하고, 사업 영역별 BU의 책임 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조앤더주스, 카톡으로 선물하세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 가 운영하는 덴마크 프리미엄 즉석 착즙주스 브랜드 '조앤더주스(JOE & THE JUICE)'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앤더주스'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카페 브랜드다. 물과 시럽 없이 국산 사과와 다양한 과일, 채소만을 사용해 착즙하는 '100% 착즙주스'가 특징이다. 이번 입점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조앤더주스의 착즙주스와 샌드위치 등 30여 종의 대표 메뉴를 만날 수 있다.

사진재 기자 현대그린푸드

## 마시고, 씹고, 씹고, 씹고 크는 단백질 식품 시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른바 '담뱃 경제'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단백질 식품 시장도 쑥쑥 커지고 있다. 담뱃 경제란 건강과 체력 관리에 관한 관심과 소비도 늘면서 관련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특히 산업계에서 '가치소비', '지속가능성' 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가 중시되면서 대체육, 식물성 단백질 등 '착한 단백질'을 활용한 식음료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빙그레·이디야커피 등 속속 론칭=빙그레는 단백질 전문 브랜드 '더:단백'을 론칭하면서 단백질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더:단백'은 더하다, 채우다를 뜻하는 '더'와 '단백질'을 합성한 단백질 전문 브랜드다. '더:단백'의 첫 제품인 250ml 드링크(RTD) 제품을 시작으로 제품군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국내 단백질 제품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라며 "이번 '더:단백' 드링크 초코 출시를 시작으로 더 쉽고 맛있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디야커피도 같은날 '프로틴 시리즈'를 선보였다. '프로틴음료' 3종과 '영양

스낵바' 2종 등 총 5종으로, '카라멜 프로틴 밀크', '바닐라 프로틴 밀크' 등 음료뿐 아니라 '이디야 단백질바 초코쿠키', '이디야비타민바 그릭요거트'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이들 제품은 매장에서 물론 배달 서비스로도 만날 수 있다.

식음료 기업들이 단백질 시장에 주목하는 건 이 시장이 고속 성장세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단백질 제품 시장 규모는 2018년보다 3배가량 늘어난 2500억 원으로 추산한다. 올해는 3300억 원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비건음료·고기 등 분야 확장=코로나 팬데믹 이후 거세진 ESG경영 돌풍에 힘입어 대체 단백질 제품의 인기도 뜨겁다. 대체육,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음료 등 관련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hy는 최근 단백질 전문 브랜드 '프로틴코드(PROTEIN CODE)'를 론칭하고, 관련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hy가 단백질로 단일 브랜드를 선보인 것은 처음이다. 프로틴코드의 차별화 포인트는 100% 식물성 단백질로 채운 제품들로



건강 관심 '담뱃 경제' 확산  
빙그레·hy 등 브랜드 론칭  
올 국내 시장규모 3300억  
대체육·비건푸드 출시 활발



빙그레 '더:단백' hy '프로틴코드'

구성됐다는 점이다. 첫 제품은 '프로틴 코드 드링크'로 음료, 파우더 형태로 판매한다.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대체육을 앞세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곳도 있다. 매일유업이 블루다이하운드사와 협력해 2015년 선보인 식물성음료 '아몬드브리즈' 시리즈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급성장세를 타고 있다. 정식품도 최근 식이 섬유와 단백질을 함유한 식물성 건강음료 '리잇미닛'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대체육 사업도 활발하다. 2019년부터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비온드미트'를 수입하는 동원F&B는 할인마트, 백화점 등에서 약 15만 개 이상 팔려나가는 등 관련 사업이 재미를 보자 제품 다각화를 서두르고 있다. CJ푸드빌의 투썸플레이스와 손을 잡고 식물성 대체육 샌드위치 '비온드미트파니니'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떡볶이, 고추장, 샐러드 등 대체육 브랜드를 활용한 메뉴를 출시하고 나섰다.

롯데그룹은 R&D 컨트롤타워 격인 롯데중앙연구소를 통한 식물성 대체육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롯데중앙연구소는 지난해 3월 바이오기업 바이오제네틱스, 위드바이오텍스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대체육 개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롯데푸드는 올해 1분기 IR 자료를 통해 중장기 핵심 사업으로 비건푸드를 제시했다. 2019년 마라클버거 패티를 B2B사업으로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에 공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B2C사업 일환으로 제로미트를 출시했다.

◇"3000억 달러 글로벌 사업 기회"=CJ제일제당은 고기향을 내는 천연 소재 시스테인을 앞세운다. 시스테인은 기능성 아미노산으로 고기향을 내는 소재로 알려졌다. 향후 식품소재 시장 중 향료(Flavor)를 중심으로 천연 시스테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대체육을 비롯한 미래 식품과 할랄(Halal), 비건(Vegan)용 음식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CJ제일제당 측은 보고 있다.

풀무원도 3월 '식물성 지향 식품 선도 기업'을 선언하고 식물성 단백질, 고기 사업을 본격화했다. 올해 국내에만 20여 종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이익 늘어난 기업에 주목하라”

#23년여 전인 1998년 12월의 일이다. 현대와 LG그룹의 사운을 건 반도체 ‘빅딜’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은 호출을 받고 청와대를 찾았다. 가방 속에는 빅딜의 부당성을 설명할 자료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구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가방은 열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폭음으로 쓰린 심정을 달랠 때는 얘기는 유명한 일화다. 애지중지하던 반도체를 포기한 구 회장은 이후 “반도체의 ‘반’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한다. 이렇게 태어난 회사가 하이닉스(옛 현대전자)다. 하지만 빛더미에다 반도체 불황이 겹치면서 하이닉스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결국 2012년 SK하이닉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품으로 넘어갔다. 인수 2년 만에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실적을 갈아치웠다. 미래를 내다본 최 회장의 공격적인 투자 덕분이다. 2003년 3월 한때 125원 ‘동전주’였던 SK하이닉스는 2012년 2만 원대로 올라섰고, 31일 현재 12만7000원(시가총액 92조 원)으로 ‘투자왕’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 증시의 쌍두마차가 됐다.

“올해는 기술주 같은 업종 밸리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여의도 펀드매니저들에게 “하반기 유망 업종”을 물으면 “업종 대신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답이 되돌아오곤 한다. “좋은 종목을 찾는 기준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관해선 나름대로 잣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투자이익(IP, Investment Profit)’ 개념이다. 특히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 시대에 IP의 중요성은 더 커질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3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7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179%로 장을 마쳤다. 이는 2018년 11월 22일(2.2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투자이익이란 투자이익률[투자자본수

익률(ROIC)-가중평균자본비용(WACC)]×전년도 투자금액[자본적 지출(CAPEX)]으로 계산한다. ◇“국내 기업 선제적 투자 진행” = 3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기준 12개월 예상 자본적 지출(CAPEX) 증가율은 18%였다. 대만 45% 다음으로 높았다. 미국 10%, 독일 9%, 일본 -4%, 중국 -19%보다 높다. 매출액 대비 자본적 지출(CAPEX) 비율은 9.2%로 대만 7.1%보다 높았다. 대만 다음으로는 독일 6.5%, 일본 6.2%, 미국 5.6%, 중국 5.1% 등 이었다. 이젠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경우 자본지출 증가율과 매출액 대비 자본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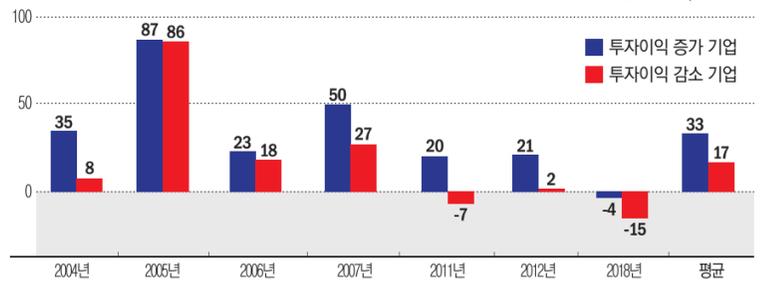
경기 회복 따른 투자 회수 국면 투자이익 늘면 주가수익률 높아

인플레이션 신호 국고채 10년 금리 30개월 만에 최고 2.179%

이익전망 밝은 업종 반도체·SW 예상 증가율 ‘지주·자본재’ 높아

“국내 기업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작년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1%는 국내외 기관의 예상을 웃도는 성적이다. 기업 설비투자 덕분에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설비투자 규모는 164조2849억 원으로 2019년(153조8547억 원)보다 6.8%(10조4302억 원) 늘었다. 설비투자를 주도한 것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반도체 시설 구축에만 28조9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투자 회수 국면 진입 가능성 =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 미리 설비투자를 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 회복이 시작되면 실적 개선 폭이 확대되면서

투자 회수 국면 주가 수익률 (단위: %, 시총 100위 제조업 기업 기준)



주가 탄력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올해는 투자 회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 회수 국면이란 자본적 지출(CAPEX) 증가 이후 매출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000년대 이후 2004년~2007년, 2011~2012년, 2018년 등 7개 연도가 해당한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적 지출(CAPEX) 증가율은 2.5%였다. 하나금융투자가 과거 투자 회수 국면(7개년)에서 국내 제조업 중 투자자본수익률(ROIC)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 내 기업의 주가수익률은 연평균 34%나 됐다. 반면 하위 10% 내 기업은 21%에 불과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대

상으로 연간 주가수익률 비교에서도 전년 대비 투자이익(IP) 증가 기업 평균 주가수익률은 33%, 전년 대비 투자이익(IP) 감소 기업 평균 주가수익률은 17%에 머물렀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국내 업종별 투자이익을 비교하면 올해 예상 투자이익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반도체였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대비 투자이익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소프트웨어였다. 지난해 투자이익 대비 올해 예상 투자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지주·자본재로 나타났다. 지난해 투자이익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 운송, 화장품, 화학, 디스플레이, 철강 등이다. 반면 호텔·레저, 소매·유통, 에너지, 조선, 유틸리티 등은 투자이익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이인아 기자 ih@

## 쌍방울 등 이스타항공 예비입찰 참여

정식 입찰 무산 시 예정자가 인수...이달 새주인 결정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쌍방울그룹 등이 참여했다. 이달 중에 새 주인이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매각권사 달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이날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했다. 쌍방울그룹 계열사와 사모펀드 등이 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 계열사 광림은 그룹 내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참여했다. 이스타항공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LOI를 제출한 인수 의향자를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실시하며 6월 14일 매각 금액이 적힌 입찰서류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매각은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있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한 상태에서 별도로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인수 예정자가 인수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스타항공은 입찰 공고를 내기 전 중견기업과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의향자가 제시한 가격이 조건부 투자계약서상 매각금액보다 낮으면 조건

부 투자계약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입찰금액의 규모, 자금 투자의 방식, 자금 조달 증빙 등의 항목을 평가해 인수자를 선정한다. 입찰 금액은 평가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수 의향자의 회사 경영계획 적정성과 장기 비전을 포함한 영업계획, 종업원 고용 보장 및 승계 명사와 고용 안정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 제시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연내 국내선 운항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절차에도 돌입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 신라젠 새 주인에 엠투엔

600억 규모 유상증자 참여

신라젠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투엔과 600억 원 규모의 3차 배정 유상증자 본계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신라젠은 엠투엔에 보통주 1875만주를 주당 3200원에 발행한다. 납입일은 오는 7월 15일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이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5월 초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돼 발행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회사는 신주발행가격 산정을 위해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에서 주식가치를 평가받았다. 평가 금액은 하한선 2057원에서 상한선 3200원으로, 양사는 상한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엠투엔은 신라젠 신주 전량을 3년간 보호예수하기로 했다. 최대 주주로서 책임경영을 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엠투엔과 본계약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겠다”면서 “본계약 이후에도 양사의 긴밀한 협력으로 거래 정상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엠투엔 관계자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 진출을 위한 큰 결음을 내딛게 됐다”며 “신라젠과 동반 성장 및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당사와 미국 바이오기업 GFB(GreeFireBio)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FB는 엠투엔이 최대 주주로 있는 미국의 신약개발 전문업체로, 엠투엔은 이 기업을 통해 신라젠과 함께 바이오사업을 키워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신라젠은 지난달 14일 투자금액, 자본의 성격, 자금조달계획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엠투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양사는 본계약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 동학개미 “이젠 메타버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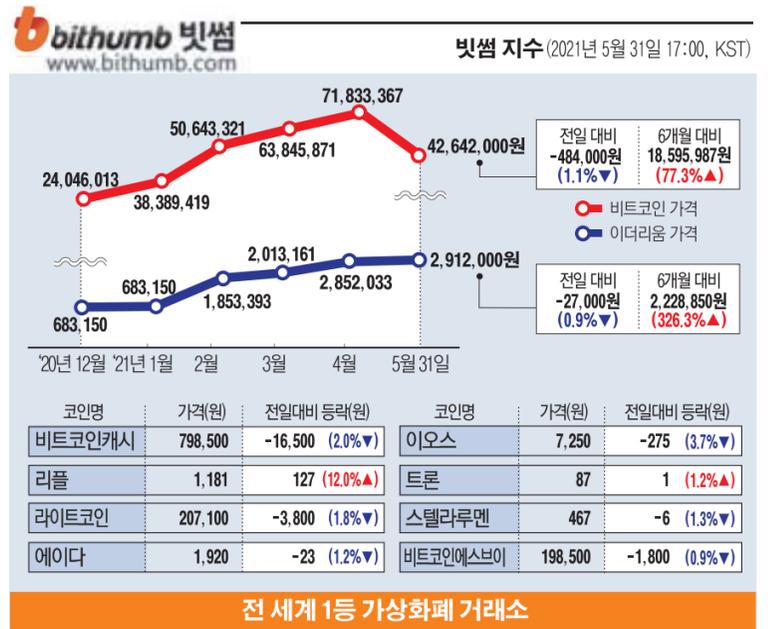
일주일 새 13~78% 수익률 업계 ‘묻지마 투자’ 주의보

최근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투자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의 가상현실 개념이 현실과 가상이 구별했다면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세계를 뜻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선익시스템(+1.26%), 자이언트스텝(+3.12%) 등 메타버스 관련주가 상승했다. 유포시스템은 1만7300원으로 보합을 기록했다. 이들 기업 주가는 최근 1주일 새 13~78%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정부와 미디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활동이 본격화되자 ‘동학개미’들이 투자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이날 행사는 △현대차 △네이버랩스 △맥스트 △버넥트

△라온텍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카카오엔터 △CJ ENM △롯데월드 △분당서울대병원 등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기업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해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은 오는 2025년 2800억 달러(약 311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460억 달러(약 51조 원)와 비교했을 때 6배 이상의 규모다. ‘메타버스 테마’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기업이 가진 기술과 메타버스가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플랫폼 자체가 메타버스가 될 수 있고 디바이스가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업체를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로보어드바이저 ‘키우Go’ 출시 키움증권, 데이터 170만건 분석

키움증권은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로보어드바이저 ‘키우Go’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키우Go’는 인공지능이 고객의 자산을 키워간다(Go)는 뜻으로 키움증권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 목표와 투자 기간, 투자예정금액, 투자자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재 시장 상황에 적합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투자일임(Wrap) 서비스다. 행동재무학 기반의 강화학습 모델을 이용해 각기 다른 자산구간의 최적 투자비율을 찾아 운용한다. 키움MRI(Market Regime Index)를 이용한 경기국면분석 기법을 활용해 금융시장에 따라 그 비율이 조정된다. 이를 위해 키움증권은 과거 30년 이상의 기간 170만여 건의 금융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모델을 설계하고 테스트했다. 손영지 기자 eom@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이 제도로 임차인(세입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인(집주인)의 과세 금액을 늘려 결국 전월세 금액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을 이루는 것으로 지난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 가동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각 도의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계약금이 7000만 원인데 월세는 20만 원인 경우처럼 어느 한 쪽만 기준선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주택은 물론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

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규·갱신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집주인 “과세 자료 쓰일라” 거부감 세입자 “공급 위축 이어질까” 불안 들쭉이는 전셋값, 기름 부을 수도

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전국 주요 도시의 웬만한 임차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증서의 법적 증거력을 법률로 인정하는 확정일자 계약 신고시 자동으로 부여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 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 당사자는 개인(임차인·임대인) 정보는 물론 임대 목적물 정보, 갱신 여부와 갱신 임대료, 계약 기간, 전세보증금 및 월세 규모, 종전 임대료 등 임대계약 내용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 집주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보증금

**‘전월세신고제’ 개요** ※ 출처: 국토교통부

시행	2021년 6월 1일
대상지역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
대상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도 포함)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방법	- 계약 체결 30일 이내 -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둘 중 한쪽이 양측 서명 담긴 계약서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 신고 위임 가능 -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과태료	미신고: 4만~100만 원 차등, 허위신고: 100만 원

및 월세 규모, 즉 임대소득의 노출이다. 이 같은 정보가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4월 “임대차 신고 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관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당장엔 과세 가능성을 부정하지만 향후 신고제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세 카드를 고민할 수 있다”고 봤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규제 시행의 회피 움직임이 감지된다. 일부 집주인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을 규제 시행 전으로 앞당기

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제도 시행 전 선제적으로 전세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도 보였다. 서대문구 아현동 A공인 측은 “최근 8-9월 만기를 앞둔 전세 갱신 계약에 대해 집주인들이 계약을 미리 하려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며 “소득 노출을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소득 공개를 꺼리게 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집주인들이 연쇄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임대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등 전세 불안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임대료이다. 특히 정부가 과세 움직임을 보이거나 과세가 지나치다고 인식할 경우 임대 사업을 포기하는 집주인이 속출해 전월세 시장이 예상보다 위축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은 다시 들쭉이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와 3기 신도시 청약대기수요,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올해 하반기엔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들쭉이는 수도권 전세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제가 표준임대료 도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서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상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전초전”이라며 “이는 임대차시장 위축과 매물 잠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복비 대수술’ 수수료율 얼마나 내려갈까

소비자 “너무 비싼 중개수수료율” 중개사 “결코 높은 게 아냐” 팽팽 정부 이르면 이달 중 개선안 발표

정부는 이르면 6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 보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두고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와 “결코 수수료율이 높은 게 아니다”고 맞서는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최대 관심사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18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중개서비스에 대한 생각이나 수수료 수준 등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입장 등을 취합해 최대한 이견을 해소하려고 한다”며 “6~7월께 개선안을 발표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발언처럼 이번 중개수수료 개선안의 핵심은 소비자 단체와 공인중개사 간 첨예한 입장 차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다.

소비자 단체는 현행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5000만 원 미만 시 0.6%(최대 25만 원),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시 0.5%(최대 80만 원)이다. 2억~6억 원 미만은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거래 시에는 0.9%가 적용된다.

만일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만 810만 원에 달하는 셈이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현행		권익위 권고안(1안)	
거래금액	상한요율	거래금액	상한요율
5000만 원 미만	0.6%(최대 25만 원)	6억 원 이하	0.5%
5000만~2억 원 미만	0.5%(최대 80만 원)	6억~9억 원 이하	0.6%
2억~6억 원 미만	0.4%	9억~12억 원 이하	0.7%
6억~9억 원 미만	0.5%	12억~18억 원 이하	0.4%
9억 원 이상	0.9%	18억~24억 원 이하	0.3%
		24억~30억 원 이하	0.2%
		30억 원 초과	0.1%

다. 12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1080만 원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31일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2375만 원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가 1000만 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 중개수수료가 결코 높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중개수수료는 3.5~6%, 일본과 독일은 3~6%, 영국은 3~7%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0.4~0.9% 수준이다.

이번 개선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된 만큼, 소비자 단체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2월 국토부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와 세입자의 중개보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권익위는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 중 국토부는 1안과 2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의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반면 학계에선 3안과 4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며,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안이다.

관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 서울에서 30억 원짜리 매물을 중개한다고 하면 0.9%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2700만 원씩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에서 5400만 원을 받게 된다”며 “차라리 중개수수료율을 단일화해서 적당한 요율을 매겨야 한다. 중개수수료도 지금까지 양쪽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에게서만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적정 수준의 중개수수료율을 찾아내야 한다”며 “시장에 맡겨서 일정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협의를 통해 보수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ry0403@

## ‘신안약수아파트’ 예비안전진단 통과 신정뉴타운 ‘마지막 단추’ 펜다

준공 35년차 440가구 규모 재건축 기대감에 교통 호재 호가 한달 새 1억 넘게 올라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 내 신안약수아파트가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 신월동 신안약수아파트는 지난 28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예비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신안약수아파트는 1986년 완공돼 올해로 입주 35년 차를 맞은 단지다. 가구 수는 총 44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별로 68~87㎡ 형으로 구성돼 있다.

신정뉴타운은 2004년 지구 지정 이후 정비사업을 거쳐 총 8242가구 규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중이다. 신정뉴타운 개발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신축 아파트도 줄줄이 들어서고 있다. 신안약수아파트와 맞닿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3045가구)는 지난해 5월 입주했다. 또 인근에 있는 ‘래미안 목동 아텔리체’(1497가구)는 1월 집들이했다. 이에 앞서 2012년과 2014년에는 신정

**‘신안약수’ 아파트**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동 591-1
가구수	440가구(총 5개 동)
준공연도	1986년 7월
전용면적	68~87㎡
매매호가	9억5000만 원 (전용 87㎡형 기준)

뉴타운 두산위브와 롯데캐슬이 각각 완공됐다.

주변에서 주거 정비사업이 착착 진행되면서 신안약수아파트 몸값도 오르고 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7㎡ 형은 현재 호가가 최고 9억5000만 원으로 지난해 거래가(8억 원)에 비해 1억5000만 원가량 올랐다. 신월동 Y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계속 높여 부른다”고 전했다.

개발 호재도 많다. 신정뉴타운 바로 옆을 지나서 서울 경전철 목동선은 내년부터 공사에 돌입한다.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사업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지방 큰손’ 수도권 아파트 매입 줄어

4월 거래량 7222건...17%↓ “세금 규제에 투자 수요 위축”

뚝뚝한 한 채를 찾아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물리던 지방 큰 손들의 매수세가 점차 잦아들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4월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입 거래량은 7222건으로 전월 대비 16.9% 줄었다. 지방 거주자의 수도권 상경 투자는 지난해 12월 1만2875건을 기록한 뒤 올해 3월 8694건으로 쪼그

라들었다.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한동안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강화된 부동산 세제에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단기매매자의 세금(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투자 목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로 외지인의 서울 원정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 수도권 아파트값 평균 7억 눈앞... 9개월 새 1억 ‘경침’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오르며 7억 원에 비ץ 다가갔다. 평균 전셋값은 4억2000만 원을 넘어섰다.

3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5월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6억

9652만 원으로, 지난달(6억8676만 원)보다 976만 원 올랐다.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고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2016년 10월 4억471만 원으로 처음 4억 원을 돌파한 뒤

2년 1개월 만인 2018년 11월(5억124만 원) 5억 원을 돌파했다. 이후 1년 11개월 만인 지난해 10월(6억455만 원) 6억 원을 넘어섰다.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작년 8월(5억8943만 원)부터 이달(6억 9652만 원)까지 불과 9개월 만에 1억 원 넘게(1억709만 원) 오르며 7억 원에 다가섰다. 이동욱 기자 toto@

# 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오른 김오수 불법출금·원전수사가 첫 시험대

이광철·백운규 처리 주목... 檢 정권 수사 방향타 될 듯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김 검찰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등 여러 과제를 매끄럽게 처리해야 할 시험무대에 오르게 된다. 정권에 민감한 사건들도 김 검찰총장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김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검찰총장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이광철·백운규 사법처리 여부 관심= 김 검찰총장은 당장 대검찰청에 기소 의결로 올라온 두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금지에 가담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워 보고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김 검찰총장의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 전 주요 사건의 처리가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민감성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주요 사안에 관한 결정을 신임 총장에게 미뤘다.

이에 따라 대검에 올라온 두 사건은 김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검찰총장이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분하는지가 앞으로 검찰의 권력 수사 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이들에 대한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 임기 말 '방탄 총장'을 자처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인사·조직 개편 난제도=김 검찰총장 앞에는 조만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수 파괴를 포함한 탄력적 인사를 예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수사 승인제'로 불리는 검찰 조직 개편안도 김 검찰총장이 넘어야 할 산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검찰총장이 개편안 찬성 의견을 내면 취임 직후부터 조직 내부의 신망을 잃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 청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지정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수사를 통제하는 것" 등 의견이 나왔다.

한편 박 장관이 고검장 물갈이를 예고한 후 조상철 서울고검장에 이어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오 고검장은 김학의 사건을 사실상 지휘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제주 한라산 백록담 남서쪽 인근 절벽이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된 규모는 약 200㎡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환경부가 실시한 '백록담 담수 보전 및 암벽붕괴 방지방안'에 대한 용역 조사에 따르면 백록담 북벽과 서북벽의 암반층이 허물어져 원형인 분화구가 말굽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붕괴가 이뤄진 백록담 남서쪽 절벽면이 허물게 드러나 있는 모습. 뉴스스

## 《남양유업 창업주 외조카》 “황하나 마약 부실수사 검사 징계 정당”

법원 '감봉 취소소송' 원고 패소

남양유업 창업주 외조카인 황하나(33)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중화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황 씨 외 6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A 씨는 경찰서로부터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B 씨의 수사기록 사본을 받았다. 해당 기록에는 B 씨가 황 씨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권유받고 황 씨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했다는 증언과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해 서로가 주

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황 씨에게 경찰 의견서를 인용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김정호 총장)은 A 씨가 증거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지 않았고 B 씨의 판결문을 확인하는 등 보완조사를 하지 않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원회는 A 씨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해 최종 결정됐다.

A 씨는 "B 씨 판결문만으로 황 씨를 기소하기는 어려워 합리적 판단으로 추가 수사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찰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보면 원고는 B 씨 증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송치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확인했을 뿐 B 씨에 대한 형사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 檢,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 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

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 씨는 당시 공동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 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어렵다고 판단해 최 씨를 기소했다.

최 씨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은 윤 전 총장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며 시작된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냉면꾸은 늘 주방 앞에 앉는다

“완벽주의자보다 경험주의자가 되라!”

“아, 모든 인간의 이야기에는 눈물과 해학이 있고, 연민과 사랑이 있고, 절망과 고통이 있구나. 이야기가 재미있고 진솔하고 발효된 맛이 깊어 열심히 먹다보면 내가 그 동안 성실하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살아야 내 삶 또한 진실한 인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문득 깨닫는다.”

— 정호승(시인)

## 고두현의 산책자를 위한 인문 에세이

# 『냉면꾸은 늘 주방 앞에 앉는다』

우리 삶에 깃든 눈물과 해학, 연민과 사랑……  
시인의 '생각 산책' 길에 펼쳐진 이야기 잔칫상  
재미있고 진솔하고 발효된 맛이 깊다!

“아, 모든 인간의 이야기에는 눈물과 해학이 있고, 연민과 사랑이 있고, 절망과 고통이 있구나. 이야기가 재미있고 진솔하고 발효된 맛이 깊어 열심히 먹다보면 내가 그 동안 성실하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살아야 내 삶 또한 진실한 인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문득 깨닫는다.”

— 정호승(시인)

냉면꾸은 늘 주방 앞에 앉는다 | 고두현 지음 | 14,800원 | 256쪽

문학의숲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영화빌딩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전국 모든 서점에서 구매가능합니다.

# “기업에 고용유지금 지원, 코로나發 해고 대란 막았죠”

## 서울 동맥을 가다 ㉔

770개 업체 4000명 해고 대신 휴직... 올해 5580명 지원  
경로당 ‘폭염대피소’ 활용 위해 어르신 백신접종 적극홍보

### 이성 구로구청장

“우리가 방침을 정하면 서울시나 정부가 똑같은 내용을 발표한다니까요.” 이성 구로구청장은 3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마련하면 이윽고 같은 정책이 서울시나 정부에서 발표된다면서 흥미로워했다.

이 구청장은 행정에 달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들어섰고,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시에서 근무했다. 2010년부터 줄곧 구로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서울시 행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관한 구청 정책도 그에게서 많이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경로당 이용은 백신 예약률을 높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다음은 여름에 경로당을 ‘폭염대피소’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죠. 많은 어르신이 더위를 피할 곳이 없어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폭염

대피소를 운영 못 했고요. 올해는 관내 경로당 전체가 폭염대피소가 돼 어르신 누구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는 올해 주요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현재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반응을 공유하기 위해 후기도 수 집 중이다.

동시에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해 고용 안정 기반을 구축했다.

“코로나19가 터질 때 해고 대란을 제일 걱정했습니다. IMF 사태처럼 말이죠. 다행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용보장에 가입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분을 6개월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 업체에는 직원 유급휴직 시 지급해야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중 사업자 부담금을 6개월간 제공

했죠.” 여러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 직원을 내보내고 있지만 구로구는 해고 대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770개 업체, 직원 4000명에게 6억2000여만 원의 고용유지금을 지원했다. 사업자가 비용 부담이 없어서 직원을 휴직처리 해준 덕에 4000명이 일자리를 지켰다. 올해는 1120개 업체, 558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일자리 지키기에만 몰두한 것은 아니다. 신규 고용을 창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특화돼 있다.

‘G밸리형 구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미취업 청년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인턴 근무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G밸리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중장년층은 틈새인데요. 저희가 교육, 취직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 양성과정이었어요.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서울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을 추천합니다. 취업률도 높아요.



이성 구로구청장이 지난달 3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더 좋은 구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구로구

100명 교육받으면 40명 정도. 마을버스 기사 과정도 있는데 마을버스는 만성적인 인력난이라서 취업이 더 잘돼요.”

그간 구로구는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힘썼다. 마침내 2016년 타당성 재조사 끝에 기획재정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서 2차 타당성 재조사가 결정됐다.

이 구청장은 2차 타당성 재조사 용역

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가) 1년 남았다고 뒷정리나 하고 갈 생각은 없어요. 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다른 욕심도 없어서 제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사심 없이 공직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구민들이 지금까지만큼 구청장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석 기자 mystic@

## 서울시, 광화문광장 문화재 우기 전 보존조치

### 발굴된 유구 흙으로 덮어 보호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과정에서 발굴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우기 전 안전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문화재 보존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우기 전 보호조치 의견에 따라 1일부터 발굴된 유구를 양질의 흙으로 덮어 현지 보존한다. 이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 보존 계획을 마련해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어 보존과 활용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선 조사결과 조사구간 일부에서 15~19세기 조선시대의 관정 터를 비롯해 민가 터와 담장, 우물 터, 수로, 문지 등 다양한 유구가 나왔다.

발굴된 문화재는 현장공개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21~30일 10일간, 하루 3회로 계획보다 관람 횟수를 늘렸고, 현장 공개에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보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1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로 드러난 조선시대 옥조거리 흔적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뉴스시

현장관람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영상물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이달 중 서울시 등 영상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영상에 담기는 내용은 광화문광장 문화재 발굴 과정과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에 대한 설명 등으로 꾸며진다.

정상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발굴된 문화재 보호를 위해 복도를 시행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를 보존과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 신천맛골~올림픽공원 ‘명소 조성’

### 송파구, 발전방안 용역 나서

서울 송파구는 미래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신천맛골~올림픽공원 일대 활성화 및 발전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방문 수요증가 대응 방안 △대규모 개발활력의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시설 발굴 △지역자원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발전구상 및 실행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올림픽로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분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성화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주요

거점별 공간 구상 및 국제교류복합지구와의 연계방안 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 롯데월드,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주변에 산재한 우수 관광 자원을 연계해 올림픽로를 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실현가능한 발전구상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해 세부전략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올림픽로를 송파구의 미래발전 전략의 중심축으로 위상을 높이고 뉴욕 브로드웨이, 파리 샹젤리제와 같은 보행 중심 ‘월드 클래스 스트리트’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 광진구, 빅데이터로 해충 예측방역

### 발생 건수 등 분석 후 사전방역 필요 구역 파악

서울 광진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모기·바퀴 등 해충 방역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방역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행안부와 협업을 통해 월별로 해충 관련 민원 발생지역을 분석·예측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한다.

먼저 구가 보유한 해충민원 발생건수, 건축물, 거주인구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안부가 소상공인 업소정보, 기상정보 등 외부데이터를 결합해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온도·강수량 등 기상조건과 건축물 연식·개수 등 도시환경이 해충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월별로 사전방역이 필요한 지점을 파악했다.

또 주택가 등에 설치된 ‘해충퇴치기’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충퇴치기 설치 지역

의 모기 관련 민원이 미설치 지역 대비 약 62.5%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 분석결과를 해충방역 업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달까지 바퀴벌레에 대한 우선방역 예측지점을 위주로 집중방역을 추진하고 모기민원 빈발 예상지점에는 모기방역 소독 전담반을 구성해 소독·모기유충 구제 등 방역활동을 10월까지 진행한다.

모기 민원 발생이 높은 지역에 해충퇴치기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이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방역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틈새없는 촘촘한 방역을 추진해나겠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 “청계천변 따라 11.88km 자전거 여행”

### 순환형 자전거도로 정식 개통

서울시는 청계광장에서 청계천변을 따라 동대문구 고산자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식 개통했다고 31일 밝혔다.

청계천 자전거도로는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에 이르는 청계천로 직선구간 5.94km에 조성됐다. 청계천을 사이에 둔 양방향에 총 11.88km 길이로 한 바퀴 도는 순환형 도심 자전거 전용도로다.

시는 차량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 조업공간이 혼재된 청계천로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차도는 축소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데 주

안점을 뒀다.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하게 다니고, 상인들은 생업을 위한 조업공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간별로 도로여건과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맞춤형으로 조성했다. 청계5가-고산자교(북측)는 기존에 차도에 조성된 자전거 전용차로를 보도와 같은 높이로 올려 차도와 분리했다.

청계2가-청계7가(남측)는 당초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었는데 안전통행로에 있던 가로수를 옮겨 심어 공간을 확보한 후 전

화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를 최대한 완만

하게 다듬고 미끄럼방지 포장해 안전성과 주행성을 확보했다. 각 구간 진입로에는 총 30여개 LED 표지판을 설치해 야간 시간대 시인성도 크게 개선했다.

시는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통을 기념해 다음 달 13일까지 스텝 투어 ‘청계천 도장깨기’, 주말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 부스, 청계천길 기획영상,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테마 라이딩 등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청계천 자전거도로로 완성으로 동쪽으로 청계천, 중랑천을 따라 한강과 동남·동북권 지역까지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세종대로, 한강대로를 따라 한강까지 연계되는 서울 자전거 간선도로망이 완성되는 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찾기  
KB GoodJob

KB굿잡과 함께 지금, 성공취업 ON

# 2021 제1차 KB굿잡 온택트 취업박람회

2021.5.31<sup>월</sup> - 6.11<sup>금</sup>

<https://kbgoodjob.kbstar.com>

검색창에 **KB굿잡** 🔍 검색해보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212-1호(2021.05.18), 광고물 유효기한 2021.06.11까지

 KB 국민은행

# “청년세대 피선거권 보장, 25세·40세 제한부터 풀어야”

〈국회의원〉 〈대통령〉

## 공식 출범 40일 맞은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 선거권 18세와 함께,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만 개정하면 돼 1호 정책 '청년기초자산제' 현금 지원 아닌 재분배하자는 것

4월 21일 공식 출범한 청년정의당의 본격 시동을 건 강민진 대표. 그동안 7000여 명 당원의 당심을 한데 모으는데 힘썼고, 이제 '청년 정책' 실천을 위해 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갈구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강민진 대표는 20·30세대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강 대표는 지난달 2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을 내세우기 전에 40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행 헌법규정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헌법으로 개헌부터 하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 등 일반 피선거권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재는 만 25세 이상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 사실상 20대 절반은 피선거권이 없는 셈이다.

강 대표는 “많은 젊은이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나이를 선거권 나이(만18세)와 똑같이 맞추면 된다”면서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확대는 대선과 달리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21대 총선 당시 당직자 피선거권 제한에 따라 하루 차이로 25세 기준을 맞추지 못해 출마하지 못했다. 이에 피선거권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청년정의당은 출범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됐지만 다양한 청년 관련 과제들도 의제 테이블에 올렸다. 우선 그동안 정의당이 꾸준히 의제로 다룬 '청년기초자산제'를 1호 정책으로 내세우며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강 대표는 “다른 당에서도 유사 형태의 기초자산제를 얘기하지만 결모습뿐 아니라 철학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정책은 청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재분배 성격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층 기성세대로부터 부와 자원을 물려받은 자녀, 이른바 금수저의 자원 일부를 청년들에게 공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대 간, 계층 간 재분배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출발선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청년정의당은 내년 대선까지 기초자산제 정책 취지를 최대한 알리고 정의당은 이를 기반으로 대선 아젠다로 가져갈 가능성도 크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정의당 당사 스튜디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 5대 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5시간 미만 노동자 대상 주휴수당·퇴직금 지급 △저소득 청년노동자 4대 보험료 지급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보장 △불안정 고용수당 도입 △배달라이더 안전배달료 도입 등이다. 강 대표는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중 대부분은 20대 청년으로 이들 대상 퇴직금 미지급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적 틀이 없으면 고용주는 30시간을 15시

간 2명으로 쪼개기 고용을 해 청년들이 투입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노동자 안전배달료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는 이들 임금은 고무줄”이라며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 배달 횟수를 과도하게 늘리고 그러다 보니 사망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부분 과속 등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배달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08@

### 장애산악인 김홍빈 히말라야 완등 신협사회공헌재단, 1억 후원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왼쪽)과 김홍빈 원정대장.

신협사회공헌재단은 31일 신협중앙회관에서 장애인 전 세계 최초로 8000미터 14좌 완등에 도전하는 산악인 김홍빈 원정대 후원을 열고 1억 원을 지원했다.

재단은 장애인 산악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8000미터) 14좌 완등에 도전하는 산악인 김홍빈 원정대를 위해 광주용신협, 신협중앙회, 사단법인 김홍빈 과학만들기의 기부금에 재단 기부금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홍빈 대장은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6194m) 등반 중 사고로 동상에 걸려 손가락 10개를 모두 잃어 장애를 갖게 됐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히말라야 13좌를 차례로 올라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으며 현재 마지막 1좌 브로드피크(8047m) 등정만을 남겨 놓고 있다. 원정은 10일 출국을 시작으로 7월 29일 입국까지 총 50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중 46세 시각장애인 장홍 아시아 첫 에베레스트 등정

중국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다.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장홍(46·사진)이 같은 달 24일 등정을 시작해 27일 베이스캠프로 귀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충칭 출신인 장 씨는 녹내장으로 스물한 살에 시력을 잃었다. 2001년 미국 시각장애인 에릭 웨이헨메이어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처음 에베레스트를 오른 것을 보고 산악 가이드 친구의 도움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장 씨는 “나는 걷는 곳을 볼 수 없어서 두려웠고, 무게중심을 잡을 수 없어서 가끔은 넘어지기도 했다”며 “힘들었지만, 그런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했고, 이것이 등반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최경주, 시니어 PGA 챔피언십서 종합 3위 '최고 성적'

한국 골프의 오랜 간판인 노장 최경주(51·사진)가 견재함을 과시했다. 최경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메이저 대회인 시니어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컨트리클럽(파70·6968야드)에서 열린 키친에이드 시니어 PGA 챔피언십(총상금 35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3언더파 277타를 기록했다. 레티프 구센(남아공)과 함께 공동 3위다.

대회에서 기록한 공동 3위는 최경주가 챔피언스 투어에서 거둔 최고 성적이다. 지난해 10월 도미니언 에너지 챔피언십 클래식 공동 6위가 최고 순위였다.

우승은 8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알렉스 체카(독일)다. 체카는 지난달 초 열린 메이저 대회 리전스 트래디션에 이어 시니어



투어 메이저 2연승을 거뒀다. 2위는 팀 퍼트로빅(미국)이 차지했다.

만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PGA 챔피언스투어는 메이저 대회가 5개로 구성되며, 최경주가 3위에 오른 시니어 PGA 챔피언십은 메이저 중에서도 총상금 규모가 US 시니어오픈(총상금 400만 달러) 다음으로 많은 '특급 대회'로 분류된다. 시니어 PGA 챔피언십 우승 상금은 63만 달러(약 7억 원)다. 문선영 기자 moon@

### 발명의 날 '올해의 발명왕'에 김석중 브이터치 대표

#### 원거리·비접촉 가상터치 개발

김석중(사진) 브이터치 공동대표가 31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발명진흥회가 주관한 '제56회 발명의 날' 행사에서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됐다.

김석중 공동대표는 세계 유일의 원거리·비접촉·비착용 가상터치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가상터치는 3D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사용자의 동작을 AI(딥러닝) 기술로 분석해, 사람이 가리킨 곳과 의도(모션·제스처)를 검출한다. 이를 통해 원거리·비접촉·비착용 터치 제어를 가능케 해주는 기술이다.

김 대표는 가상터치 관련 특허를 국내 43건, 해외 51건, 총 94건 출원했으며 이중 43건의 특허권을 확보했다. 가상터치 관련 독보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지적재산권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브이터치는 2021년 출시한 디스플레이 제어용 '가상터치 패널'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1'에서 'CES 혁신상'을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또 삼성전자의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 출신이기도 하다.

'올해의 발명왕'은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발명가를 매년 1명만 선발하는 상으로 엔지니어들에게 최고의 영예로 꼽힌다. 2021 올해의 발명왕은 역대 최초로 스타트업에서 수상해 더욱 이례적이란 평가다. 송영록 기자 syr@

### 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

#### 김혜경 前 서울지역본부장 임명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신임 능력평가이사 김혜경 전 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을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성 상임이사가 임명된 것은 공단 설립 이래 처음이다. 김 신임 능력평가이사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다.

김 이사는 1985년 8월 공단 입사 이후 본부 자격관리부장, 총무부장, 해외취업국장, 서울지역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공단 내 대표적인 여성 관리자로서 담당사업을 창의적·도전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열린 사고방식을 지향하며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가는 현장전문가로 손꼽힌다. 서병곤 기자 sbg1219@



### PKF서현파트너스, 안만식 회장·배홍기 대표이사 선임

PKF서현파트너스는 안만식(왼쪽 사진) 이현세무법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배홍기(오른쪽) 컨설팅본부장 겸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서현파트너스는 다국적 글로벌회계 컨설팅 그룹인 PKF멤버십 서현회계법인과 이현세무법인, 서현ICT, 법무법인 두현이 서로 배타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차별화한 통합 회계, 세무, 법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설립됐다.

안만식 신임 회장은 조세 분야 실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세청 조사국을 마지막으로 2007년 이현세무법인을 창립, 조세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 법인으로 성장시켰다. 안 회장은 PKF서현파트너스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돼 320명 규모의 종합 컨설팅 조직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손영지 기자 eom@



배 신임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 및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7년 KPMG에 입사한 이래 미국 KPMG 필라델피아 오피스에서 근무했고, 삼성KPMG 감사부문 IM2 본부장, 마케팅부부장, KPMG Mongolia 대표 등을 역임했다.

서현회계법인은 김진태 감사본부장의 대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김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삼성 KPMG 감사부에서 근무 후 2019년 서현회계법인 회계감사·내부회계관리제 도 구축전문가이다. 손영지 기자 eom@

### 인사

◆환경부 ◇3급 승진 △환경보전정책관 실 환경보전정책과장 조현수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 성지원 △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순환정책과장 김고웅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이준기 △수도권정책과장 이재평 △자동차운행보험과장 김은정 △버스정책과장 장구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장 박정호

◆국방기술품질원 ◇보직 임명 △국방종합시험단장 김상엽 △생산품질경영부장 송재용 △지휘정찰센터장 장지형 △항공센터장 김창영 △유도탄약센터장 장봉기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청주 캠퍼스 이한복 △아산캠퍼스 김용목 △전남 캠퍼스 송보석 △구미캠퍼스 황병관 △울산 캠퍼스 윤성중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 지점장 △도곡WMⅡ지점장 최영우

◆뉴시스 ◇승진 △전무 박진용 △편집국장 염영남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 김종원 △편집국 정치부장 주성식  
◆한국금융신문 △편집국 건설부동산부장 권혁기

### 부음

▲지관선 씨 별세, 김홍인(현대그룹 그룹커뮤니케이션실장·전무) 씨 장인상 = 31일, 이화여대목동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일, 02-2650-2742  
▲하동훈(전 속명예대 불문학과 교수) 씨 별세, 권영자(전 정부제2장관·제15대 국회의원) 씨 남편상, 하사라·사현(연합뉴스 선임기자) 씨 부친상, 윤태섭(전 스포츠조선 연예부장) 씨 장인상 =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일 오전 9시30분, 031-900-044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송현경경제연구소장

미국은 상위 0.1%, 1%의 소득 집중도가 높고 소득불평등이 시장의 경쟁에 주로 기인한다. 소수의 실리콘밸리 사업가나 월가 금융인 등의 소득이 아주 많다. 반면 한국은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법과 제도의 불공정한 특혜나 과보호에 주로 기인한다. 한국이 미국보다 불평등을 받아들이기 더 어렵고, 사람들이 불공정한 대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은 불평등이 심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이 불공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불공정으로 인한 불평등이다. 한국의 불평등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는 구조나 원인이 많이 다르다. 미국은 상위 0.1%, 1%의 소득 집중도가 높고 소득불평등이 시장의 경쟁에 주로 기인한다. 소수의 실리콘밸리 사업가나 월가 금융인 등의 소득이 아주 많다. 반면 한국은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법과 제도의 불공정한 특혜나 과보호에 주로 기인한다. 한국이 미국보다 불평등을 받아들이기 더 어렵고, 사람들이 불공정한 대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일 것이다.

특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정책적 특혜와 과보호, 세제 혜택 등을 알아보자.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잘 알려져 있고, 금융기관 경영진의 고액 연봉도 경영능력보다는 진입장벽을 통해 얻어진 독과점 이익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감면받는다. 사무실 상가 등의 임대소득도 법인화를 통한 비용처리와 상속 및 증여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의 고소득도 엄격한 정령 규제와 업무영역 보호 덕이다.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는 정부 예산으로 많은 임금을 받고, 낙하산 기회까지 누린다.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도 괜찮은 보수와 정년보장, 고액연금의 혜택까지 받고 있다. 교수는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정규교수와 시간강사의 차이는 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보다 심하다. 공기업과 금융기관 직원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 덕에 고임

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임금도 노동조합의 단합된 힘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덕을 상당 부분 보고 있다. 한국은 상위 10% 정도가 이렇게 크건 작건 특혜를 누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하기 매우 어렵다. 성인 기준 상위 10%는 400만 명 정도 되어 숫자가 많고, 이들이 여론 주도층이라 정치권이 개혁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남의 탓으로 돌려 개혁의 화살을 피하기는 아주 쉽다. 재벌 탕, 정규직 노동자 탕, 관료 탕, 국회의원 탕, 교수 탕 등이 모두 가능하다. 모두가 조금씩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 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도 바뀐다. 불평등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집세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폭등한 집값·집세의 이익도 소득 상위 10% 정도가 대부분 가져가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비싼 집값·집세는 좁은 국토나 국민성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도적 특혜

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특혜는 아주 많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거의 과세하지 않는 것, 시가와 차이 나는 공시지가 제도를 통해 부동산 세금과 보유 규모를 크게 줄여 주는 것,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세입자에 대해서는 거의 혜택이 없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특혜가 넘쳐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도덕적 자제심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는 말은 참 듣기 좋았다. 그러나 한국의 불평등과 불공정 상황은 바뀌지 않은 듯하다. 많은 국민이 좌절하고 희망마저 버렸을 것이다. 문 정부 사람들이 뜻이나 의지는 있었지만 불공정에 기인한 한국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자. 앞으로 불공정과 불평등, 특권과 특혜 등에 대한 논의가 더 많아져야 한다. 국민이 공정이나 평등에 대한 희망을 버리면 개혁의 길은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 정책발언대

오형나  
한국판뉴딜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전문위원·경희대 교수



## 그린 뉴딜,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실행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그간 장기 비전을 말할 때 궁극적으로는 지향하지만 급하면 미뤄도 되는 정도로 취급되던 '저탄소화와 자원순환'이 그린 뉴딜에서는 에너지, 산업, 교통, 지역발전, 건물, 보건, 사회통합정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핵심 기준이자 지극히 경제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의 표현대로 '그린 뉴딜이 다시' 그것도 강력한 구심력을 갖춰 떠오른 것이다.

작년 7월 발표된 한국판 그린 뉴딜 역시 앞서 언급한 내용을 끌고루 담고 있다. 2020~2025년 동안 약 73조4000억 원을 투입해 단기적으로는 팬데믹으로 줄어든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로 EU나 미국의 그린 뉴딜 목표와 유사하다. 석 달 뒤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순배출량 제로'를 이를 시점을 2050년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그린 뉴딜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올해에는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법화가 진행

중이며, 기후대응기금, '그린 분류체계',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개인과 지역의 그린 전환을 지원하는 공정한 전환 메커니즘, 탄소가격 신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탄소세 및 에너지세 조정,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탄소중립위원회 설치를 통한 실행 거버넌스 보완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계획 및 정책 인프라가 준비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와 재정 투입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룰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그린 뉴딜이나 탄소중립의 스케일이 크다. 결국 민간의 자원과 행태 변화가 뒷받침돼야 대전환의 실마리가 열린다. 민간의 참여가 없다면 그린 뉴딜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으며 구조 전환을 견인할 힘도 재원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은 사회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작되었다기보다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올 상반기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에는 분명 이전과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글로벌 가치사슬상 '고객'에 해당하는 세계적 기업이 'RE100'이나 ESG 경영 또는 배

출량 데이터 공개를 요구'한 것이 계기일지는 모르나 한국 기업들이 매우 능동적으로, 상당한 추진력을 가지고 '그린 웨이브'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 역시 프로젝트의 저탄소와 지속가능성 정도, 기업의 ESG 성과나 기후변화에의 영향을 주요 투자지침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그린 뉴딜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관건은 이러한 관심과 우리가 행동 변화와 비용분담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이다. 특히 탄소다배출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환 비용이 만만치 않을 우리로서는 큰 결심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업, 소비자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 뉴딜의 세부전략을 하나씩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저탄소 제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려움, 즉 '저탄소 전환을 어렵게 하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나 '주요 수출국의 탄소국경조정세 위협', '국제사회로부터의 감축목표 상향 조정 요구' 등이 훗날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 (blessing in disguise)'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 이투데이, 말투데이

☆ 라인홀트 니부어 명언  
"신이며,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일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바꿀야 하는 일에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더불어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미국 신학자.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유명한 그는 정의로운 전쟁(just war) 사상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으로 이름난 리처드 니부어는 그의 동생이다. 그는 오늘 세상을 뒀다. 1892~1971.

☆ 고사성어 / 도모시용(道謀是用)  
길 가는 사람과 집을 어떻게 짓는 게 좋은지 상의하면 의견이 제각각이라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이다. 좃대 없이 남의 말만 따르다가 일을 망쳐버린다는 뜻이다. "집 짓는 일, 지나는 사람과 의논하는 것 같아 시작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如彼樂室于道謀 是用不濟于成]." 출전 시경(詩經) 소민편(小旻篇).

☆ 시사상식 /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국민총생산(GNP)의 결함을 보완하려고 미국의 W. D. 노드 하우스와 J. 토빈이 제안한 지표. 그들은 GNP에 포함된 항목 중 경제적 후생과 무관한 공해 제거비 등의 항목은 제외하고, 경제적 후생과 관련 있는 가정주부의 자가용역 등의 항목은 가산하여 측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표는 계수적인 조정의 성격이 강하고 삶의 질적 측면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 속담 / 돌절구도 밑 빠질 날이 있다  
아무리 튼튼한 것도 오래 쓰면 망가지듯 못 쓰는 날이 있다는 말.

☆ 유머 / 정원 초과  
신부 둘이 탄 차가 과속으로 걸렸다. 경찰이 "신부님, 과속은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죠"라고 말하자 신부의 대답. "괜찮네. 하느님 아버지께서 같이하시니 벌일 없을 거네."  
경찰이 놀라며 되물었다. "그럼 하느님까지 세 분입니까? 과속에 정원 초과 벌금을 내셔야겠습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사가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로 고심에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각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최대 5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두면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십여 개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신한은행처럼 이미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빅테크사 혹은 거대 금융사 등에는 희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고객 확보가 필요한 소규모 핀테크사나 금융사 입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 기자수첩

조성진 자본시장부/csjin2002@

## 증권사 '마이데이터' 소비자 선택 받을까

있다.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증권사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현재까지 흐름을 봤을 때 증권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지난 4월 마이데이터 2차예비허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이 분허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고, 분허가를 통과하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8월 이전에 사업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설령 2차 예비허가 신청에 참여한 다수의 증권사가 8월 이전에 분허가를 받아도



이미 1차 분허가를 받아 꾸준히 준비한 기업과 서비스의 질적·양적 격차는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미래에셋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나머지 증권사들의 전략은 아직 베일에 감춰져 있다.

확실한 건 마이데이터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각 증권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고객의 선택을 받는 5개 서비스안에 들지 못하면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만 날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진정한 경쟁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 비트코인이 말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요즘 전 세계 경제가 나를 두고 아단법석을 떨고 있다. 내재가치 없는 쓰레기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 화폐라며 칭송도 하길래 직접 나서 내 생각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어. 내 아버지는 나카모토 사토시로 알려져 있지. 그래, 내 이름은 비트코인이야.

국적은 미국이고, 미 동부 시간으로 2008년 10월 31일 오후 2시 10분에 태어났어. 아버지가 암호학 전문가와 아마추어 등 관련자 수백 명에게 내 출생 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낸 때지.

아버지는 “나는 신뢰할 만한 제3자 중개인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당사자 간 1대 1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자통화시스템을 연구해 오고 있다”라는 간결한 문구를 적어 보냈어. 여기에 A4지 9장 분량의 논문을 내려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도 첨부했어.

이제 내가 태어난 이후 13년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느낀 궁극적 세 가지와 그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말해 볼까 싶어.

우선 “내가 정말 ‘돈’이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야.

돈은 교환, 가치 저장, 가치 척도라는 3가지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 그런데 내가 나를 냉철히 보면, 이 세 가지 기능에 모두 문제가 있어.

우선 1초 동안 나를 거래할 수 있는 건수가 7회 정도야. 거래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 개발자들이 내 이복동생 격인 비트코인캐시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

## 데스크칼럼

### 박성호

부국장 겸 산업부장



래 봐야 1초당 61회 정도라고 하네. 비자카드는 초당 2만4000건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하니 교환기능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어.

그럼 가치 저장과 가치 척도는 될까? 거래 추이를 보면 왜 직장인들이 24시간 잠도 못 자며 내 몸값에 매달려 있는지 알 수 있지.

올해 1월 3만500달러 정도였는데, 4월에는 무려 6만3000달러대까지 수직상승 하더라고. 그러다가 다시 한 달 만에 40% 이상 폭락했어. 만약 달러화나 원화 가치가 이렇게 급등락했다면 폭동이 일어났을 거야. 사실 내 몸값이 처음에 0.08센트였다는 걸 알고 있나 모르겠네. 일관성 쌍둥이를 만들어내는 데 드는 전기비용이 그 정도였거든.

두번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하고 나를 헛갈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버지는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되는 통화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라”라고 역설했거든. 화폐제도의 탈중앙화를 꿈꾼 거지. 반면 CBDC는 정부가 통제하는 ‘돈’을 ‘디지털’화한 것뿐이야. 기존 화폐제도 뿌리에서 거래

방식만 달리 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해석 아닐까?

비트코인 닷 오알지(bitcoin.org) 웹사이트에는 이런 글도 게재돼 있었다고 해. “비트코인은 부패한 정부와 금융기관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 금융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정부의 권위를 쇠퇴시킬 준비가 돼 있다.”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 스티븐 루한의 2016년 선언문 내용이야. 나를 CBDC와 동일하게 본다면 아버지는 화를 내실 거야.

마지막으로 “내 인기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라는 점도 무척 궁금해.

나를 네덜란드 톨립버블에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알아봤어. 네덜란드에 톨립이 전해진 건 1554년이야. 톨립 번종이 관심을 끌면서 인기가 올라갔지. 1620년대에 톨립 재배자들은 모두 돈을 벌었다네. 톨립 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진 거지. 1636년엔 톨립 구근(알뿌리) 가격이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오름세를 지속했어. 1636년에 절정에 달했지만 1637년 2월 마침내 공황을 일으켜 값이 폭락했고 가치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지. 그래도 20년 정도 톨립 열풍이 지속된 셈이긴 해.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 인기가 언제든 급전직하하더라도 과히 놀라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니까 판단은 각자가 해 주길 바라. 다만, 아버지가 나를 창조한 취지는 최소한 ‘돈 놓고 돈 먹기’ 투기판이 아니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줬으면 좋겠어.

vicman1203@

## 시설

### 긴축 대비 급한데 또 전국민에 돈 풍다는 여당

정부와 여당이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시동을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차 추경이 경제에 특급 유휴유 역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8~9월중 모든 국민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풀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추석 전 소비진작 효과를 위한 것이다. 코로나와 관련한 5차 재난지원금이자 전 국민 대상은 지난해 5월 이후 두 번째다. 작년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씩 지급한 반면, 이번에는 개인별 지급이 거론되고 있다.

추경은 역대 가장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피해 계층 지원 예산까지 더하면 3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이 예상된다.

여당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또 돈퍼주기에 나선다는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더 빨라질 나랏빚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올해 최대의 확장재정에 따른 558조 원 본예산에 이미 14조9000

억 원의 1차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으로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본예산 기준 47.3%에서 48.2%로 높아진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 비율이 36.0%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다만 올해 세수는 좋아졌다. 1분기 국제수입이 88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9조 원 늘었다. 그럼에도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분기 48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추경을 위해서는 또다시 막대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돈풀기로 일관했던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과 함께 이제 재정과 금융의 긴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자산매입축소(테이퍼링)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캐나다와 유럽 각국의 긴축도 가속될 전망이다. 우리 한국은행도 연내 선제적 기준금리 이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긴축은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대비가 급하다. 이런 마당에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살포하겠다고 한다. 확장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이미 잔뜩 불어난 정부와 민간 부채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심각한 리스크가 되고 있다. 금리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이고 보면 이제 돈풀기를 멈추고 더 이상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한다.

## 노트북을 열며



### 박은평

사회경제부 차장

일주일에 한 번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다. 분리수거를 하면서 나의 소비패턴을 점검하게 된다. 어떤 물품을 사용했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재활용 상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인 쓰레기 줄이기를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지만 내 생활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부끄럽다. 음료를 마신 일회용 컵은 줄지 않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이용하는 새벽배송에 충전재와 박스도 여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기업들은 ESG(Environmental 환경 · Social 사회적 책임 · Governance 지배구조) 경영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의 첫걸음인 쓰레기 줄이기에 신경 쓰는 기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ESG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다. 상품을 생산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재활용해 다시 생산하는 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재활용 참여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다. 2019년 기준

## 플라스틱에 ‘N차 인생’을!

분리수거율은 87.1%에 달한다. 실제 재활용률은 어떻게. 환경부의 국내 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30%대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OTHER’로 표기된 용기는 재활용이 어렵다. 과자나 라면 봉지, 핫반 용기 등에 쓰이는데 신소재 혼합 플라스틱이라서 재활용이 안 된다. 또 칫솔, 일회용 수저 등 플라스틱 함유가 적은 제품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대부분 폐기물 연료로 소각된다. 기업들은 재활용이 쉽도록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쓰레기를 묻을 곳은 사라지고 있다. 전국의 매립지와 소각장은 포화 상태다. 서울시는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가 2025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환경부와 함께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지자체는 없다. 1차 공모에서 매립지 후보지를 찾지 못해 7월 9일까지 재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주변 지역 환경개선사업비 별도 지급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으나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아직 없다. 민선 지자체장이 주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해결책 없는 갈등을 방지하지 말고 영구적인 쓰레기 처리 대안을 내놓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코로나19로 늘고 있는 일회용품 등 쓰레기를 줄이려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페트병은 라벨을 떼어내고 버리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배출장에 가면 치킨상자에 은박지나 닭뼈가 들어 있거나 플라스틱 용기 안에 음식물이 남아 기름이 흥건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기업과 정부, 소비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코로나19로 마스크 뒤에서 답답한 숨을 쉬는 것이 일상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조금 불편한 삶을 살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어떤 불편을 감내해야 할지 모른다.

pepe@

## 특허, 특!

### 대학 상표등록과 ‘경상국립대’

상표는 사용이 중요하다. 법이 등록 불가로 정한 상표라도 그중 일부는 상표등록 출원 전 사용으로 특정한 상품출처로 인정되면 등록되는 예외가 있고,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경상국립대 교수가 인사하면서 “경상국립대 000입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그래서 인상적이었다. 대학교마다 교명을 상표로 등록하기는 하지만 경상국립대에는 색다른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경상국립대학교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등재되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교명에 설립 주체인 국립이 포함된 첫 번째 사례이다. 교명 변경의 직접적인 계기는 경남과기대와 통합이지만, ‘국립’을 학교 이름에 넣기까지는 경상대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약칭을 교명으로 한 국립대학인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가 인근에 있는 상황이므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국립대학인 경상남도 국립경남대라는 교명을 원했다. 그런데 사립대학인 경남대가 있었다. 서울시립대가 시립대로 약칭되면서 서울대와 병존하는 상황을 참

고해, 정부에 경남국립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교명 변경을 불허했고, 경상대가 찾은 방법은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표였다.

‘경남국립대학교’라는 상표에 대해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출원과 심판, 소송이 이어지면서 내려진 결론은 경남대학교와 식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시립대로 약칭되고 국립서울대학교는 서울대로 불리어 서로 식별력을 갖지만, 경남국립대학교가 국립대로 호칭되거나 경남국립대로 불려서 경남대학교와 구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상국립대학교라는 교명 선택은 경남대학교는 물론 경남의 다른 국립대학인 창원대학교도 반대하지 않을 절묘한 방안이었다. 경상대는 경남과기대와의 통합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에 ‘경상국립대학교’ 상표 45개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상품류 구분이 45종류이므로 상표 45개는 동일 이름으로 출원할 수 있는 최대수이다.

문한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SAMSUNG**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류케어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다 맞춰서  
**마침내 의류케어의 완성**

**BESPOKE 슈드레서 | BESPOKE 에어드레서 | BESPOKE 그랑데<sup>AI</sup>**

**가전을 나답게.**